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2023. 12.

장우현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2023. 12.

장우현

서 언

정책을 포함한 모든 사업 영역에서 개별 사업의 정의와 정책분류체계는 가장 중요한 기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분류 단위에 따라 크게 묶으면 적게는 수십 개,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많게는 수만 개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재정사업들을 적절히 정의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첫 단계부터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재정사업 분류체계에는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여 예산의 편성, 정책의 집행, 정책의 관리, 정책의 평가 각 단계를 진행하는 데 주된 장애 요인이 되어 왔다. 이는 정책 수행의 주체인 부처 중심으로 사업을 정의하고 분류했던 관례를 답습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원의 장우현 박사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배반적이지 않은 사업분류체계를 설정하되 복수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하나의 분류로만 분류할 것을 강요하는 기존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배제와 전체포괄(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MECE) 원칙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는 사업분류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상호배제와 전체포괄 조건의 만족 및 정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정책분류체계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여 정책분류체계의 구성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현업의 정책분류체계를 육하원칙 기준으로 다시 재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주목하여 중간단계로서 상위분류체계와 하위분류체계를 구성하고 두 분류체계를 조합하여 접근하는 혁신적 실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는 제시된 전례를 찾기 힘든 제안이므로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저자는 실제 구축한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제 사업들을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31개 세부 사업 중 기업/산업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사업의 수는 81개, R&D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사업은 7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지금의 분류체계로 분류하면 양자택일식으로 문화로만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시한 사실은 흥미롭다 하겠다. 육하원칙 기준으로 볼 때 문화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과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기업과 산업 분류에서는 배제하고 문화로만 분류해 온 것은 더 깊게 살펴볼 필요 없이 상식 수준에서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 제안한 정책분류체계에 교집합 처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주요한 진전이라 하겠다.

저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준 이들에게 본 지면을 통해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저자는 우선 구축된 정책분류체계에 따라 실제 정책을 분류하여 이중 검증에 도움을 준 것은 물론, 보고서에 활용된 다양한 표와 그림의 편집 등에 기여한 본원의 정부투자분석센터 김종혁 인프라 조사팀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본 분류체계의 핵심은 누가 분류하더라도 일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수많은 사업들의 성격을 이중 검증한 도움 없이는 현재 보고서의 품질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분류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고 다양한 조언을 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견해는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202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에서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반영하는 정책분류체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분류체계는 부처 중심, 공급자 중심의 분류체계로서 정보 중심, 수요자 중심의 재정성과 관리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부처 예산전달 목적의 기존 예산체계를 따르고 있어, 성과관리에 필요한 개별 사업의 정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존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COFOG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데, 해당 분류체계는 주어 중심의 분류체계로서 사업의 핵심 정보인 목적과 대상 관련 정보가 충실히 담겨 있지 않아 정책의 분류와 성과관리에 있어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기존 분류체계는 복수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하나의 부류로 강제하는 분류체계인바 공통사업과 유사중복사업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성과관리, 재정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정보 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BPCS)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분류안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되, 기존 COFOG 분류에 익숙한 현업을 고려하여 보다 친숙하게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안을 함께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정보 기술의 기본인 육하원칙에 입각하고, MECE 접근방향으로 분류 항목 간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중장기적인 이상적 분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학술적인 입장에서의 이론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사업 명칭은 중복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용적으로 중복

을 허용하되 정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현실적 사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도 함께 목적으로 한다. 또한 COFOG의 한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제안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현행 정책분류체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정의 및 구축 원칙에 대해 논하며, 제Ⅳ장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예시를 도출한다. 이어지는 제Ⅴ장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에 따른 정책분류 및 활용 예시를 제시하며, 제Ⅵ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제Ⅶ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1. 현행 분류체계의 문제점

기존의 기능별 분류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사업 정보가 충실하게 담겨 있지 않다는 점과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다른 성격을 지닌 사업을 하나의 분류로 분류할 것을 강요하는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 측면을 살펴보자면 기능별 분류는 주어인 부처를 중심으로 한 분류로서, 목적이나 수단 등 육하원칙 기준으로 중요성이 높은 정보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함이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는 분류항목들에 중복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정책들이 적절히 분류될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COFOG는 복수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하나의 분류로 분류할 것을 강요하는 분류체계인바 지출구조조정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는 공통사업과 유사중복사업 관리와 평가 및 환류에 부적절한 분류체제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사례로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정책분류의 축으로 정책수단(어떻게)과 정책 대상(누구를)의 문제 두 가지만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 예시에서 정책수단은 정부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정책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하고, 정책 대상은 기업으로서 고려할 분류기준으로 창업기-성장기-철수기 세 시기로만 나뉜다고 하자.

이렇게 보면, 대상과 수단을 교차하여 조합하면 모든 정책은 창업기 금융 지원, 성장기 금융지원, 철수기 금융지원의 세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 전체 포괄되고(Collectively Exhaustive) 각 분류는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다. 즉 창업기-금융지원정책은 성장기-금융지원에 속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는 가장 간단한 사례이므로 창업기, 성장기, 철수기 금융지원을 전부 합하면 금융지원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 MECE 정책조합의 사례: 대상과 수단

대상축/수단축	금융지원
창업기지원	창업기-금융지원
성장기지원	성장기-금융지원
철수기지원	철수기-금융지원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현행 분류의 방식을 이 사례에 적용하면, 네 가지 정책이 존재하며 서로 강제로 배타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금융지원”, “창업기지원”, “성장기지원”, “철수기지원”의 네 가지 분류이다. 이렇게 억지로 분류하면 창업기-금융지원 중 일부는 강제로 창업기지원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일부는 금융지원으로 억지로 쪼개서 분류해야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으며, 참고로 이때의 오류율은 모든 셀이 틀려 있으므로 100%이다.

〈표 2〉 기존의 분류에 따른 대상과 수단 배반 분류의 오류

대상축/수단축	금융지원(실제)	
창업기지원(실제)	“창업기지원현행”(우측누락)	“금융지원현행”(좌측누락)
성장기지원(실제)	“성장기지원현행”(우측누락)	
철수기지원(실제)	“철수기지원현행”(우측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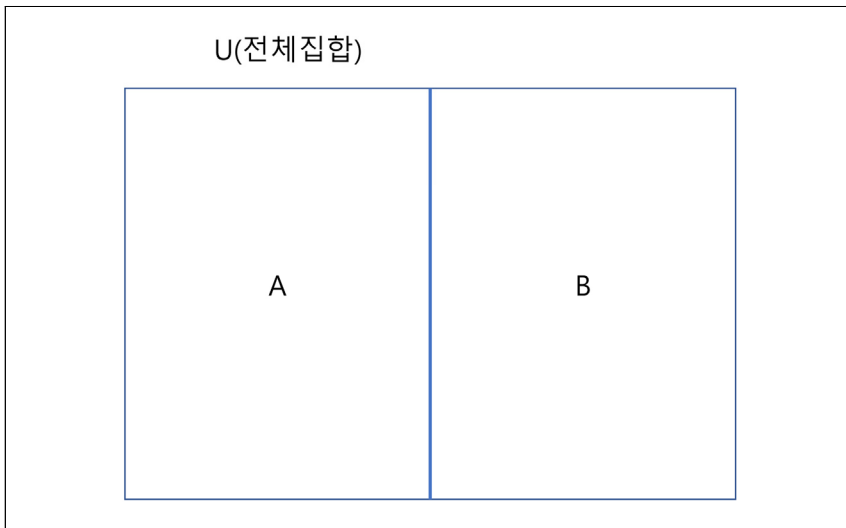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창업기지원정책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지원현행”과 “금융지원현행”을 일일이 찾아서 금융지원 내 창업기지원정책을 찾아

내야 하며, 금융지원정책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지원, 성장기지원, 철수기지원의 사업을 다 고려해야 한다. 본 예시에서는 편의를 위해 수단을 금융 하나만 골랐기 때문에 그냥 모두 더하면 되는 쉬운 문제이지만, 예컨대 수단이 금융지원과 보조금지원 두 가지가 있다면 창업기지원, 성장기지원, 철수기지원 사업 전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금융지원정책의 실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이상적인 설계의 경우는 분류체계 자체가 파티션, MECE가 되는 것이다. A와 B가 서로 교집합이 없고, 둘을 합치면 전체집합이 되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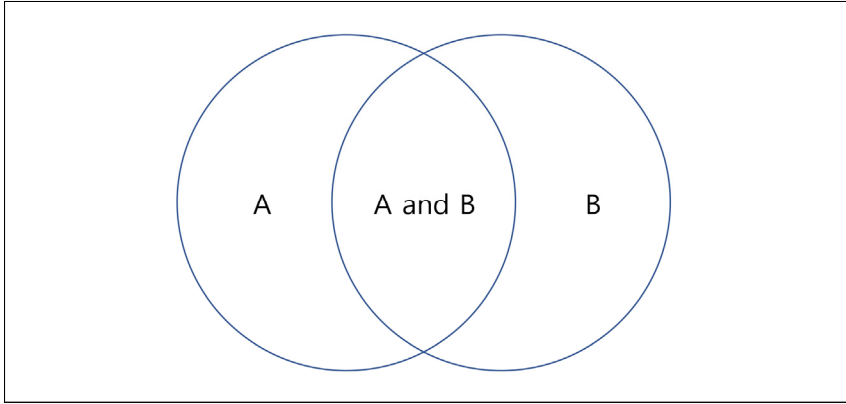
[그림 1] 이상적인 MECE 분류의 사례 벤 다이어그램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A와 B의 교집합을 따로 $A \cap B$, A and B로 처리하여 별도로 만들어 세 개의 파티션을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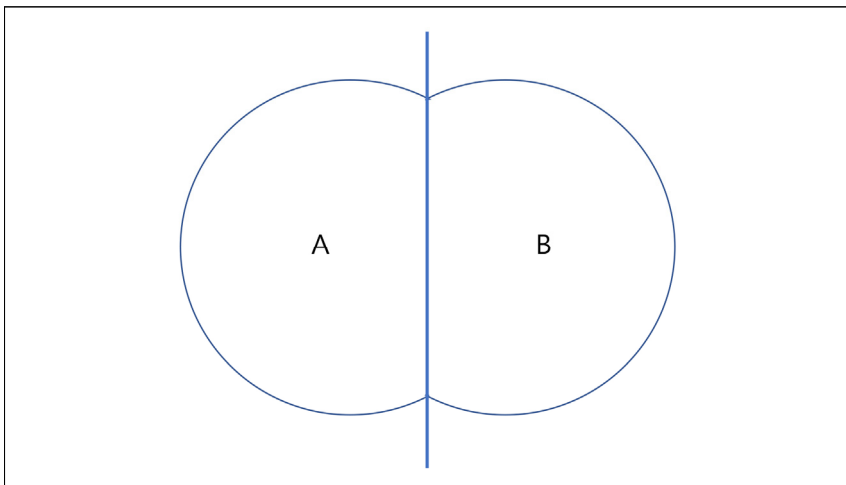
[그림 2] 절충적인 상황: 교집합 처리



자료: 저자 작성

그런데 현행 분류체계는 교집합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 근거 없이 A and B 부분을 강제로 쪼개는 방식이다. 가장 기초 수준의 집합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알 수 있으나 놀랍게도 이것이 현행 전 세계적 정책분류체계의 현실이다.

[그림 3] 현행식 정책의 다이어그램



자료: 저자 작성

2.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정의 및 구축 원칙

본 절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를 정의해 보기로 한다.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란 정보의 기본 기술단위인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의 육하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 체계가 MECE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먼저 육하원칙은 정보를 표현하는데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체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육하원칙은 MECE에서 CE기준, 즉 전체 정보를 빠짐없이 포괄한다는 전체포괄(Collectively Exhaustive)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을 사용하되 정책은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를 위하여(For whom)의 경우는 무엇을(What) 기준의 일부에 포함하여 다룬다.

육하원칙을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업들을 배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6개의 기준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ME, 상호 배반(Mutually Exclusive) 원칙을 만족한다.

이처럼 육하원칙으로 사업을 분류하면 정보를 MECE 기준으로 필요충분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는 이상적인 설계 형태가 된다. 재정사업의 시행시기, 시행장소, 수행주체, 수혜대상, 수행목적, 수행방식 등 육하원칙으로 정책의 특성 또는 속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나 현업 종사자들은 아직 기존의 분류에 익숙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로 정책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타협으로서 현행 분류를 고려하여 12대 분류는 부문판정 교집합 처리 벡터를 활용하여 차선의 중간단계로서 중복을 허용하도록 설계하고, 하위 분류를 육하원칙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3.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도출: 상위 “부문”의 분류체계 구축

부문 분류체계 구축에 있어 적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경제학에서 사회의 객체들을 구분하는 기초 단위인 가계, 기업, 정부를 기본적인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수요자로서의 개인이나 가구의 효용과 소비, 생산자로서의 기업의 생산활동, 정부 고유 기능을 대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여 기존 학문체계의 장점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정책분류를 수월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최대한 중복을 줄일 것을 꾀한다.

두 번째 원칙은 부문의 분류에서 가계, 기업, 정부의 대분류하에 중분류와 소분류를 도입하여 기존의 주요 현행 정책분류 부문명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중분류까지 진행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으로 더 나누어 접근할 것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향후 세분류, 세세분류 등으로 더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부문”의 경우 분류 중복을 허용하여, 기존 정책분류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업정책 또는 금융정책 중 택일하여 분류하여야 했지만, 제안되는 새 기준에서는 기업(산업/기업)과 정부 양쪽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국방 R&D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국방 또는 R&D로만 구분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대내행정)와 기업(생산, R&D)에 함께 포함할 수 있어, 해당 정책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에 앞서 제시한 중복 비허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새로운 상위 분류 부문

IBPCS 대분류	IBPCS 12개 중분류	주요 현행 연관 부문명(12대 기준)
가계	안전	공공질서안전, 농림수산식품, 환경
가계	환경	환경
가계	보건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
가계	복지	보건복지고용
가계	문화	문화체육관광
가계	교육	교육, 고용/일자리, R&D
기업(생산)	고용/일자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R&D, 보건복지고용, 교육
기업(생산)	산업/기업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R&D, 보건복지고용
기업(생산)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R&D, 보건복지고용, 교육
정부행정	대내행정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정부행정	대외행정	외교통일, 국방
정부행정	인프라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자료: 저자 작성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계 대분류는 경제학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외부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포함하는데, 사회의 경제적 수요 및 개인의 효용 증진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정책 영역을 다룬다.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계 대분류는 다시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문화, 교육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이는 해당 분류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안전의 제고, 환경의 개선, 건강 수준의 개선, 복지의 수혜, 문화의 향유, 배움의 증대는 개인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편익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다음 대분류는 기업(생산) 대분류로서 사회의 경제적 공급 및 생산부문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부 정책 영역을 포괄한다. 기업(생산) 대분류는 다시 고용/일자리, 산업/기업, R&D로 나누어 접근하여, 생산부문의 기본 단위인 기업 중심으로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분류는 정부행정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 국가의 기반여건의 조성 관리와 관리를 통해 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포함한다. 중분류로는 일반 중앙 행정업무, 지방 행정업무 사업들을 포함하는 대내행정, 주권국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국가 고유 업무인 외교, 통일, 국방을 포함하는 대외행정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하는 인프라로 구성하였다.

4.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도출: 하위 추가분류체계의 설계 - 5W1H

다음으로는 상위 부문별 분류에 따라 하위 추가분류체계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육하원칙과 MECE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정책분류에서 가장 이상적인 설계는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분류 축을 설정하고 각 축을 조합하여 한 사업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일반론으로서 육하원칙의 축들은 각각 직교하는 축들이 되므로, 각각의 교집합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사업들을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하겠다. 참고로 한국인들은 언어 측면에서 분류체계의 정수인 훈민정음에서 비롯된 한글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합의 강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육하원칙의 조합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 상위와 하위 추가분류체계의 결합

이를 기반으로 상위와 하위의 분류체계를 결합하면, IBPCS를 완성하게 된다. <표 4>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상위와 하위 기준으로 분류한 사례를 보여주는 표로서, 부문판별코드라고 된 첫 행이 상위 분류이며 부문부가코드로 주어진 열이 하위 분류이다. 상위 분류에서 고용/일자리와 산업/기업 정책인 것으로 판별이 되는 사업이며, 각 고용/일자리, 산업/기업 정책의 코드에 따라 세부 정보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개선된 분류체계하에서의 사업분류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처	실/국	위탁	시작 연도	현재 연도	장소	수단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문화	교육	고용/일자리	산업/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부문판별코드								0	0	0	0	0	0	1	1	0	0	0	0
(부문부가코드: 대상1)	고용 노동부 (48)	청년고용 정책관 (31)	중소 기업 진흥 공단 (010)	2017	2020	전국 (00)	예산· 보조금 (11)	N/A	N/A	N/A	N/A	N/A	N/A	성별연령 양성청년(01)	규모중기(01)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대상2)								N/A	N/A	N/A	N/A	N/A	N/A	학력소득 일반일반(00)	업력일반(00)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대상3)								N/A	N/A	N/A	N/A	N/A	N/A	업종일반(00)	업종일반(00)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특수대상)								N/A	N/A	N/A	N/A	N/A	N/A	특수대상 없음(00)	특수대상 없음(00)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목적)								N/A	N/A	N/A	N/A	N/A	N/A	취업유지(11)	인력고도화 (24)	N/A	N/A	N/A	N/A

주: 1. 고용노동부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일자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산업/기업 사업이기도 하므로 부문판정에서 고용/일자리 사업이면서 산업/기업 사업으로 분류

2. 시행주체와 연도, 장소, 수단 등 공통요소는 공통코드로 분류

3. 수요자 중심 정보인 목적(Why)과 대상(For Whom)은 부문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일자리 분류와 산업/기업 세분화 분류에 따라 세부코드 추가 부여

4. 본 표는 본 과제가 working paper 단계였을 때 장우현·김지운(2021)에서 예시로 인용된 적이 있으며, 본 표가 인용 원 표임을 밝힘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d)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6.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에 따른 정책분류 및 활용 예시

본 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제시한 상위분류체계와 하위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업들을 분류해 보는 예시를 제시함을 통해 정책분류체계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유사 중복을 한 표로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 또는 R&D 하나의 기준으로만 분류되도록 강요된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사중복사업들이 새로운 상위분류체계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중복을 한 표로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 사업 분야별 교차 성격 분포표

구분	안전	보건	환경	복지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문화	예산액 (백만원)
안전	9	2	1	1	4	4	6	7	4	5	3	9	191,854
보건	2	9	1	4	4	5	7	7	4	5	6	9	385,024
환경	1	1	3	0	1	0	2	2	2	2	1	3	84,860
복지	1	4	0	22	4	11	16	11	13	8	8	22	963,386
교육	4	4	1	4	19	12	18	15	7	12	4	19	590,856
고용/ 일자리	4	5	0	11	12	47	40	33	21	31	16	47	1,309,193
기업/ 산업	6	7	2	16	18	40	81	59	38	46	36	81	2,782,859
R&D	7	7	2	11	15	33	59	70	29	39	24	70	1,675,328
대내 행정	4	4	2	13	7	21	38	29	53	27	21	53	1,485,564
대외 행정	5	5	2	8	12	31	46	39	27	71	20	71	1,756,175
인프라	3	6	1	8	4	16	36	24	21	20	42	42	1,902,394
문화	9	9	3	22	19	47	81	70	53	71	42	131	4,060,223
문화 대비율	7%	7%	2%	17%	15%	36%	62%	53%	40%	54%	32%	100%	-

자료: 저자 작성

〈표 5〉는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사업은 문화로 분류되며 총 사업 수는 131개이다. 이 중 9개는 안전과 중복되며(첫 행 또는 첫 열), 이 9개 사업은 또다시 보건과 2개 중복, 환경과 1개 중복, 복지와 1개 중복 등으로 복수 중복된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사실상 모든 사업들이 모든 성격에서 단수도 아닌 복수로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각 행렬이 문화와 나머지 11개 분야가 중복되는 중복사업 수를 나타내는데, 기업/산업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 81개, R&D 성격이 있는 사업은 70개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들을 문화로만 분류하고 기업/산업 또는 R&D로는 분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중소기업부의 일부 내역사업의 분야별 교차 성격 분포표

구분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기업 /산업	예산액 (백만원)
안전	1	0	0	0	0	0	0	0	1	0	1	1	1,849
보건	0	1	0	0	0	1	0	1	0	1	1	1	500
환경	0	0	0	0	0	0	0	0	0	0	0	0	
복지	0	0	0	1	0	1	0	0	0	1	1	1	180
문화	0	0	0	0	0	0	0	0	0	0	0	0	0
교육	0	1	0	1	0	9	4	3	0	4	4	9	118,934
고용/ 일자리	0	0	0	0	0	4	12	2	1	3	1	12	290,074
R&D	0	1	0	0	0	3	2	7	0	4	3	7	252,098
대내 행정	1	0	0	0	0	0	1	0	15	1	10	9	69,614
대외 행정	0	1	0	1	0	4	3	4	1	16	5	16	354,227
인프라	1	1	0	1	0	4	1	3	10	5	20	14	127,063
기업 /산업	1	1	0	1	0	9	12	7	9	16	14	45	892,277

주: 분석대상 예산사업은 중소기업부의 프로그램 예산사업 11개 중 세 가지인 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 중소기업행정지원, 3. 창업환경조성 사업에 해당함. 이외에도 4.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7. 지역중소기업육성, 8.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9. 동반성장지원, 10. 중소기업육성지원, 11. 중소기업인력지원 등의 프로그램 예산사업이 존재함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사업 간 중복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업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인 분류인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별로 나누게 되면 중복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중복성을 지니는 사업들을 보다 쉽게 식별해낼 수 있게 된다. 실제 재정당국의 재정 성과관리의 기본단위가 세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역이나 내내역사업들을 고려할 필요성도 함께 확인된다 하겠다.

〈표 6〉은 내역사업별로 분류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들의 상위분류체계의 교차 성격 분포표를 작성한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세부사업으로 살펴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복의 정도가 낮은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45개 사업 중 16개가 대외행정, 20개가 인프라, 12개가 고용/일자리와 중복되는 등 다양한 중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정책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업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분류해 본 결과, 사전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명실상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문제의 정도는 심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책 제언으로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위분류체계, 즉 중복을 허용한 12대 분야 기준으로 현재의 모든 재정 사업들을 분류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실제 수행해 본 결과, 현재 제시한 상위분류체계만으로도 모든 사업의 분류가 가능하며, 적어도 정보량에서는 기존의 정책분류 체계에 비해 유의하게 우월한 정보량을 체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인력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산요구서나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여 분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만일 본 연구의 산출물이 창의적이라면 반드시 반발은 있을 것이

다. 비록 나중에는 제대로 인용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처음에는 반발이 심할 수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어도 상위분류체계의 활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분류체계에 있어서도 기존 분류체계의 정보량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운 분류를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전환 단계에서 기존의 분류를 주된 분류로 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부가 분류로 나누어 보아도 된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문화콘텐츠 산업 예시의 경우 주된 분류는 기존과 유사하게 문화인 것으로 보되, 부가 분류 정보로서 예시로 제시한 기타 분류들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처럼 접근한다면 기존 분류체계의 접근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장점은 더해지되 단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든 정책분류에서 분류 개념의 정의와 실무 가이드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현행 정책분류체계를 활용하더라도 개념의 정의와 분류 가이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수행한 리뷰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책분류체계는 각 분류의 단어 정의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당 분류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과제의 주된 기여 중 하나가 분야를 정의하고 실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실이 간과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도출하지 못하고 개인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모호한 표현을 정의와 가이드로 제시하고 정책을 분류한다면, 해당 분류 기준은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정책적 제언으로, 정책연구계에서의 집단 지성의 위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앞서 보인 것처럼 현행의 정책분류체계에서는 초등 수학 수준의 기초 집합론의 지식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그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단 기준은 유용성이 있을 때도 있겠으나, 집단 지성의 오류에 의한 잘못이 존재할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지연시키고 혁신을 막는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상위 분류를 이용하여 재정성과관리, 평가, 지출구조조정, 기초통계 산출 등 재정정책 전반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재정당국의 재정통계 산출, 사업 파악, 재정성과관리 등에 전체적·보편적으로 개선된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특정 성격을 지니는 사업들을 전수로 확인하여 도출하는 데에도 상위 분야 분류는 장점을 지닐 수 있는데, 12개 기본 분류는 물론 해당 분류 내에 속한 중분류 사업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보건 분류 전체, 기업/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기업/산업 분류 전체를 확인하면 되는 식이므로 가장 간단하며, 재정사업 중에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확인하고 싶다면 전체 재정사업 중 대외행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만 체크하여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외교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사업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대외행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만을 체크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적합 사업을 확인하여 과목 적정성을 개선하는 데에 상위 분류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분류가 가져야 하는 성격을 갖지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공통분류 사업과 지나치게 이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과목 재분류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 중복 사업의 정리, 지출구조조정 대상의 선정에 상위 분류의 결과는 바로 활용될 수 있다. 12개 분야의 성격에서 유사도가 높은 사업들의 경우를 도출하여 통폐합의 가능성이나 효율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간 단계로는 각 분야별로 육하원칙에 따른 중복이 최소화된 하위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상위 분야 분류는 최대한 체계를 잡기 위해 노력한 산물이지만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분류체계가 특별한 원칙이 있었다기보다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발생한 정부 부처들을 기준으로, 즉 육하원칙 중 주어 중심으로 정책을 분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의 상위 부문 분류체계는 대상과 목적, 수단이 혼용된 정부 “기능”형 기존 분류와 새로운 정책분류 간의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구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경제학의 기본 단위인 가계-기업-정부의 원칙으로부터 중복을 허용하는 접근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야의 MECE 분류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상위와 하위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MECE 분류가 탄생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대중들과 연구자들, 정책 담당자들이 MECE 분류에 익숙해진 이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간과정에서는 현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상위 분류와 하위 분류로 나누어 접근하며 이를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25
II. 현행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	27
1. 현행 정책분류체계 개관	27
2.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 정보의 부족과 교집합 처리의 불가능성	29
III.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정의 및 구축 원칙	36
IV.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도출	38
1. 상위 “부문”의 분류체계 구축	38
가. 가계 분류	40
나. 기업(생산) 분류	45
다. 정부행정 분류	47
라. 소결	49
2. 하위 추가분류체계의 설계: 5W1H	49
3. 상위-하위분류체계의 결합	59
V.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에 따른 정책분류 및 활용 예시	61
1. 상위분류체계 예시	61
가.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61
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사업	70
2. 하위분류체계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내역사업	104
VI. 정책제언	137

CONTENTS

Ⅶ. 결론	142
참고문헌	144

표목차

〈표 II-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12대 분야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예시	29
〈표 II-2〉 세부사업 기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과 세부사업 예산 규모	31
〈표 II-3〉 2020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정보	32
〈표 II-4〉 MECE 정책조합의 사례: 대상과 수단	33
〈표 II-5〉 기존의 분류에 따른 대상과 수단 배반 분류의 오류	33
〈표 IV-1〉 새로운 상위 분류 부문	39
〈표 IV-2〉 문화 분류의 중복처리 분류 예시	41
〈표 IV-3〉 기업/산업정책 하위 부문 코드북 예시	50
〈표 IV-4〉 개선된 분류체계하에서의 사업분류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60
〈표 V-1〉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결과	62
〈표 V-2〉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가계부문, 근거 포함	64
〈표 V-3〉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기업부문, 근거 포함	66
〈표 V-4〉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정부부문, 근거 포함	68
〈표 V-5〉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사업 분류 예시	70
〈표 V-6〉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사업 분야별 교차 성격 분포표	103
〈표 V-7〉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역사업 상위 및 하위 분류 예시	105
〈표 V-8〉 중기부 IBPCS 12개 중분류 예시	133
〈표 V-9〉 산업/기업 내역사업 코드부여 예시	135
〈표 V-10〉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내역사업의 분야별 교차 성격 분포표	136

그림목차

[그림 II-1] 이상적인 MECE 분류의 사례 벤 다이어그램	34
[그림 II-2] 절충적인 상황: 교집합 처리	35
[그림 II-3] 현행식 정책의 다이어그램	35

I. 서론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에서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반영하는 정책분류체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중 하나이다. 개별정책수요자이자 정책 재원의 근간이 되는 담세의무자인 국민들에게 사업의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국민들이 사업의 성격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분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당국이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정보들이 충실히 담긴 정책분류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분류체계는 부처 중심, 공급자 중심의 분류체계로서 정보 중심, 수요자 중심의 재정성과 관리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부처 예산전달 목적의 기존 예산체계를 따르고 있어, 성과관리에 필요한 개별 사업의 정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존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COFOG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데, 해당 분류체계는 주어 중심의 분류체계로서 사업의 핵심 정보인 목적과 대상 관련 정보가 충실히 담겨 있지 않아 정책의 분류와 성과관리에 있어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기존 분류체계는 복수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하나의 분류로 강제하는 분류체계인 바 공통사업과 유사중복사업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성과관리, 재정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정보 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BPCS)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정보를 충실하

게 답을 수 있는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실용적 사용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당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 식별 및 성과비교, 사업별 성과이력관리, 다부처 사업관리, 사각지대 파악, 재정사업 재구조화 등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분류안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되, 기존 COFOG 분류에 익숙한 현업을 고려하여 보다 친숙하게 성과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안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보 기술의 기본인 육하원칙에 입각하고, MECE 접근방향으로 분류 항목 간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중장기적인 이상적 분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학술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사업 명칭은 중복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용적으로 중복을 허용하되 정보를 충실히 답을 수 있는 현실적 사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것도 함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참고로 COFOG의 한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문제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제안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Ⅱ장에서는 현행 정책분류체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정의 및 구축 원칙에 대해 논하며, 제Ⅳ장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예시를 도출한다. 이어지는 제Ⅴ장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에 따른 정책 분류 및 활용 예시를 제시하며, 제Ⅵ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제Ⅶ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II. 현행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

1. 현행 정책분류체계 개관

현행의 사실상 모든 정책분류체계는 본 연구의 다음 절에서 제기할 공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정책분류에 대해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정책분류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책분류체계가 존재하지만, 현행 정책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재정분류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기능적 분류(Functional Classification)로 불리는 분류체계로서, 목적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하지만 육하원칙으로 검토하자면 목적과 수단, 대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개념을 “기능”이라고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사업의 분류 근간이 되는 현행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국가재정법」 제21조의3에 따라 뒷받침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장·관·항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조항에 현행 정책분류의 근간이 되는 “기능”별 분류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별 분류체계는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에 분야별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10대 분야¹⁾에 따라 분류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2대 분야²⁾에 따라 분류하여 예산안을 설명하고 장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 1)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종교, 교육, 사회보호의 10개 분야이다.
 - 2)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참고로 현행 우리나라의 정책분류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참고 자료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분류체계의 세부사항까지 소개하는 것보다는 관련한 연구를 소개하여 관심 있는 독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 목적상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최신의 자료 중 하나인 박정수·나원희(2020)에서는 재정사업 시계열 자료 구축에 참고할 현재 분류체계의 분석 내용을 담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책분류체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6페이지에는 프로그램예산체계 분야·부문에 대해서 16분야 75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분류체계가 현행 대한민국의 프로그램예산체계의 근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므로 관심 있는 독자는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16대 분야 분류는 IMF에서 제시한 GFS 1986 기준에 따른 14대 정부기능분류를 국내 사정에 맞춰 16개로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1〉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12대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표이다. 해당 분류 및 정보 생산 절차를 순서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먼저 16대 분야로 분류를 한 다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하거나 재정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다시 12대 분류 기준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에서 문제의식을 가져 볼 부분은, 과연 해당 분야에 배분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보가 정확할 것이냐는 점이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분류체계에서 해당 사업들은 문화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대해 보다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의 12개 분야이다.

〈표 II-1〉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12대 분야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예시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3~2027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252.2	262.5	273.4	4.9
교육	96.3	89.7	95.7	99.8	104.1	2.0
문화·체육·관광	8.6	8.7	8.9	9.1	9.4	2.1
환경	12.2	12.6	12.8	13.2	13.5	2.5
R&D	31.1	25.9	27.6	29.5	31.6	0.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27.6	28.4	29.3	3.0
SOC	25.0	26.1	26.2	27.3	28.0	2.9
농림·수산·식품	24.4	25.4	25.7	26.2	26.7	2.3
국방	57.0	59.6	61.6	63.6	65.8	3.6
외교·통일	6.4	7.7	7.8	7.9	8.0	5.8
공공질서·안전	22.9	24.3	24.9	25.8	26.7	3.8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120.1	124.8	129.3	3.6

자료: 대한민국정부(2023), p. 42

이처럼 다양한 정책분류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행의 모든 정책분류체계가 기본적으로 정부 기능별 분류(COFOG)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 정보의 부족과 교집합 처리의 불가능성

기존의 기능별 분류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사업 정보가 충실하게 담겨 있지 않다는 점과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다른 성격을 지닌 사업을 하나의 분류로 분류할 것을 강요하는 분류체계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 측면에서 볼 때, 기능별 분류는 주어인 부처를 중심으로 한 분류로서 목적이나 수단 등 육하원칙 기준으로 중요성이 높은 정보들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함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체계는 정책들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능별 분류체계에서는 해당 정책을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업 정보가 충실히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현재의 기능별 분류체계는 정보량 측면에서 분류체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분류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는 분류 항목들에 중복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대부분의 정책들이 적절히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에 속한 모든 정책은 당연히 산업과 기업 지원정책의 성격도 가지지만, 현재의 기능별 분류체계에서는 문화로만 분류되어 산업과 기업 지원정책의 관리에서는 누락되게 된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중소환경기업사업화 지원, 미래환경산업육성 용자 등 다양한 기업 및 산업 지원정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 환경으로만 분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대상을 기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일자리 정책으로만 분류가 되어 기업과 산업 지원정책으로는 현행 기능별 분류체계만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 II-2〉에서 제시한 것은 2021년도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외교부의 공공외교와 관련된 사업들의 수와 예산을 정리한 것이다. 각 부처에서 총 418개 사업 10조 4천억원이 넘는 사업들이 확인되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외교부가 모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파악했던 2020년의 경우는 〈표 II-3〉에 정리되어 있는데, 213개 사업 3천억원 규모의 예산만이 확인됨을 볼 수 있다. 산술적으로 200개가 넘는 사업이 공공외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분류는 정책을 파악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II-2〉 세부사업 기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과 세부사업 예산 규모

(단위: 건, 백만원)

연번	기관명	2021년도 세부사업수	2021년도 예산(세부)
1	문화체육관광부	105	2,676,025
2	교육부	14	213,881
3	통일부	41	1,328,376
4	법무부	19	93,029
5	중소벤처기업부	22	2,251,627
6	산업통상자원부	36	600,705
7	방송통신위원회	5	34,880
8	공정거래위원회	2	3,194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621,537
10	국방부	13	398,388
11	행정안전부	8	25,407
12	농림축산식품부	40	1,263,507
13	환경부	6	80,075
14	고용노동부	11	246,394
15	여성가족부	4	102,501
16	국토교통부	10	214,579
17	해양수산부	15	107,469
18	국가보훈처	3	9,242
19	법제처	2	1,106
20	관세청	10	51,353
21	조달청	4	32,352
22	산림청	16	123,294
합계		418	10,478,921

자료: 장우현 외(2021), p. 8, 〈표 II-1〉

〈표 II-3〉 2020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정보

사업 및 예산		'20년도 시행사업 수	'20년도 예산(백만원)	비고 ('19년 예산/백만원)
기관				
합계		213	301,184	511,242
1	교육부	12	78,859	62,91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60	-
3	외교부	69	32,971	23,255
3-1	한국국제교류재단	46	47,316	42,079
4	통일부	5	1,611	1,561
5	법무부	4	13,925	11,349
6	국방부	13	8,022	5,593
7	행정안전부	2	60	60
8	문화체육관광부	25	95,691	312,733
9	농림축산식품부	5	4,359	2,927
10	환경부	1	1,500	1,768
11	고용노동부	2	2,210	-
12	여성가족부	15	5,988	38,891
13	국토교통부	4	2,534	2,227
14	해양수산부	1	100	100
15	중소벤처기업부	2	260	1,900
16	국가보훈처	3	5,303	3,653
17	법제처	2	315	229

자료: 외교부(2021), p. 6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명쾌한 내용이지만 개별 정책들과 사용되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주 간단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정책분류의 축으로 정책 수단(어떻게)과 정책 대상(누구를)의 문제 두 가지만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 예시에서 정책 수단은 정부가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정책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하고, 정책 대상은 기업으로서 고려할 분류기준은 창업기-성장기-철수기 세 시기로만 나뉜다고 하자.

이렇게 보고, 대상과 수단을 교차하여 조합하면 모든 정책은 창업기 금융지원, 성장기 금융지원, 철수기 금융지원의 세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 전체 포괄되고(Collectively Exhaustive) 각 분류는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다. 즉 창업기-금융지원정책은 성장기-금융지원에 속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는 가장 간단한 사례이므로 창업기, 성장기, 철수기 금융지원을 전부 합하면 금융지원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4〉 MECE 정책조합의 사례: 대상과 수단

대상축/수단축	금융지원
창업기지원	창업기-금융지원
성장기지원	성장기-금융지원
철수기지원	철수기-금융지원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현행 분류의 방식을 이 사례에 적용하면, 네 가지 정책이 존재하며 서로 강제로 배타적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금융지원”, “창업기지원”, “성장기지원”, “철수기지원”의 네 가지 분류이다. 이렇게 역지로 분류하면 창업기-금융지원 중 일부는 강제로 창업지원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일부는 금융지원으로 역지로 쪼개서 분류해야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II-5〉와 같으며, 참고로 이때의 오류율은 모든 셀이 틀렸으므로 100%이다.

〈표 II-5〉 기존의 분류에 따른 대상과 수단 배반 분류의 오류

대상축/수단축	금융지원(실제)	
창업기지원(실제)	“창업기지원현행”(우측누락)	“금융지원현행”(좌측누락)
성장기지원(실제)	“성장기지원현행”(우측누락)	
철수기지원(실제)	“철수기지원현행”(우측누락)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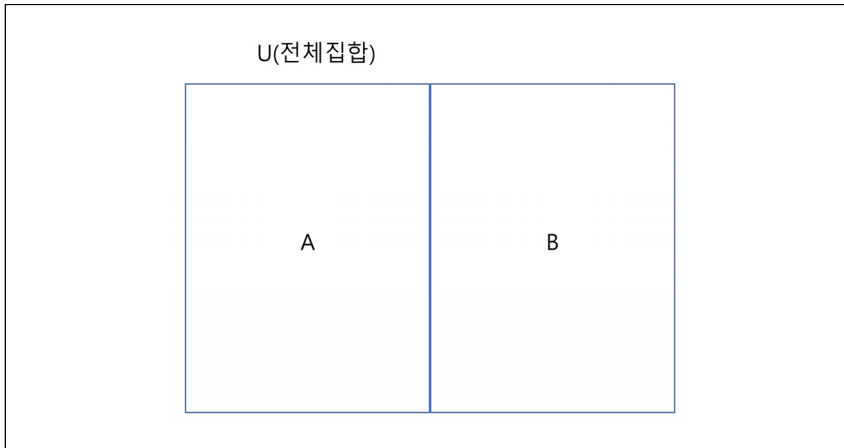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창업기 지원정책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지원현행”과 “금융지원현행”을 일일이 찾아서 금융지원 내 창업기지원정책을 찾아내야 하며, 금융지원정책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지원, 성장기지원, 철수기지원의 사업을 다 고려해야 한다. 본 예시에서는 편의를 위해 수단을 금융 하나만 골랐기 때문에 그냥 모두 더하면 되는 쉬운 문제이지만, 예컨대 수단이 금융지원과 보조금지원 두 가지가 있다면 창업기지원, 성장기지

원, 철수기지원 사업 전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금융지원정책의 실제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분류체계는, 이와 같은 분류 축이 육하원칙에 따라 더 복잡하게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기본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만일 교집합이 발생한다면 교집합을 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전체포괄-상호배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이상적인 분류는 원래 교집합이 없도록 하는 것이나 현행 분류는 교집합을 무모하게 찢는 것, 타협안은 교집합을 별도로 집합관리하여 배타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그림 II-1]과 같다. 이상적인 설계의 경우는 분류체계 자체가 파티션, MECE가 되는 것이다. A와 B가 서로 교집합이 없고, 둘을 합치면 전체집합이 되는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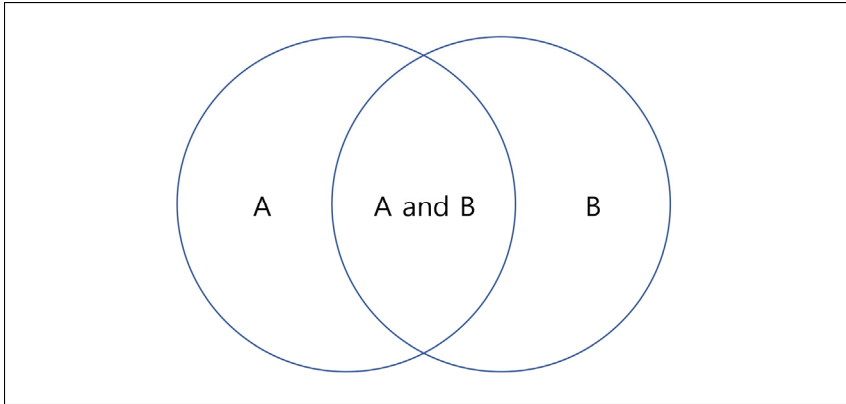
[그림 II-1] 이상적인 MECE 분류의 사례 벤 다이어그램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A와 B의 교집합을 따로 $A \cap B$, A and B로 처리하여 별도로 만들어 세 개의 파티션을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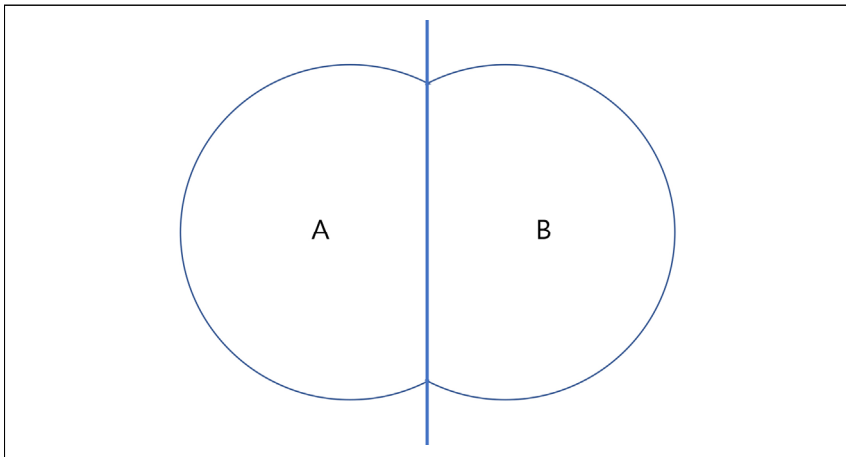
[그림 II-2] 절충적인 상황: 교집합 처리



자료: 저자 작성

그런데 현행 분류체계는 교집합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 근거 없이 A and B 부분을 강제로 쪼개는 방식이다. 가장 기초 수준의 집합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알 수 있으나 놀랍게도 이것이 현행 전 세계적 정책분류체계의 현실이다.

[그림 II-3] 현행식 정책의 다이어그램



자료: 저자 작성

Ⅲ.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정의 및 구축 원칙

본 장에서는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를 정의해 보기로 한다.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란 정보의 기본 기술단위인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의 육하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해당 체계가 MECE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먼저 육하원칙은 정보를 표현하는데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체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육하원칙은 MECE에서 CE기준, 즉 전체 정보를 빠짐없이 포괄한다는 전체포괄(Collectively Exhaustive)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을 사용하되 정책은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를 위하여(For whom)의 경우는 무엇을(What) 기준의 일부에 포함하여 다룬다.

육하원칙을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업들을 배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6개의 기준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ME, 상호 배반(Mutually Exclusive) 원칙을 만족한다.

이처럼 육하원칙으로 사업을 분류하면 정보를 MECE 기준으로 필요 충분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는 이상적인 설계 형태가 된다. 재정사업의 시행시기, 시행장소, 수행주체, 수혜대상, 수행목적, 수행방식 등 육하원칙으로 정책의 특성 또는 속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나 현업 종사자들은 아직 기존의 분류에 익숙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로 정책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비록 최선의 분류체계는 정책 간 중복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차

선의 중간단계로서 현행 분류를 고려하여 부문판정 교집합 처리 벡터를 활용하여 중복을 허용하도록 설계하고, 하위 분류를 육하원칙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어지는 제Ⅳ장에서는, 기존의 분류체계와 명칭 면에서 유사한 상위분류체계의 도출과 함께, 육하원칙으로 구성되는 하위분류체계의 설계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장우현(2016)에서는 바람직한 분류체계가 가져야 하는 몇 가지 성격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완비성, 합목적성, 유연성과 확장성, 용이성을 주요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완비성(completeness)이란 해당 사업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모든 관련 재정사업 분류가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며, 합목적성(purposiveness)은 유중복사업 검색을 통한 유사사업 간 성과 비교와 공동운영 및 통폐합, 정책 사각지대 파악, 재정사업 재구조화 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유연성과 확장성(flexibility and expandability)은 향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 구축된 분류체계에서 누락된 영역이 확인되거나 정책적으로 특정 중요 영역이 새로이 대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할 분류체계 또한 불변의 것은 아니며, 원칙은 유지하되 항상 분류체계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용이성(easiness)은 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분류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활용 등이 용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를 설계하여 보기로 한다.

IV.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도출

1. 상위 “부문”의 분류체계 구축

본 장에서는 새로운 정책분류체계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부문”의 분류에 대해 다룬다. 부문 분류체계 구축에서 적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경제학에서 사회의 객체들을 구분하는 기초 단위인 가계, 기업, 정부를 기본적인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수요자로서의 개인이나 가구의 효용과 소비, 생산자로서의 기업의 생산활동, 정부 고유 기능을 대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여 기존 학문체계의 장점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정책분류를 수월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최대한 중복을 줄일 것을 꾀한다.

두 번째 원칙은 부문의 분류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의 대분류하에 중분류와 소분류를 도입하여 기존의 주요 현행 정책분류 부문명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중분류까지 진행하였으면 연구 마무리까지는 소분류까지 구축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향후 세분류, 세세분류 등으로 더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접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부문”의 경우 분류 중복을 허용하여, 기존 정책분류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업정책 또는 금융정책 중 택일하여 분류하여야 했지만 제안되는 새 기준에서는 기업(산업/기업)과 정부 양쪽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국방 R&D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국방 또는 R&D로만 구분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대내행정)와 기업(생산, R&D)에 함께 포함할 수 있어, 해당 정책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에 앞서 제시한 중복 비허용에 따

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1〉 새로운 상위 분류 부문

IBPCS 대분류	IBPCS 12개 중분류	주요 현행 연관 부문명(12대 기준)
가계	안전	공공질서안전, 농림수산식품, 환경
가계	환경	환경
가계	보건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
가계	복지	보건복지고용
가계	문화	문화체육관광
가계	교육	교육, 고용/일자리, R&D
기업(생산)	고용/일자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R&D, 보건복지고용, 교육
기업(생산)	산업/기업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R&D, 보건복지고용
기업(생산)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R&D, 보건복지고용, 교육
정부행정	대내행정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정부행정	대외행정	외교통일, 국방
정부행정	인프라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자료: 저자 작성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계 대분류는 경제학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외부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포함하는데, 사회의 경제적 수요 및 개인의 효용 증진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정책 영역을 다룬다.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계 대분류는 다시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문화, 교육의 중분류로 나누었다. 이는 해당 분류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안전의 제고, 환경의 개선, 건강 수준의 개선, 복지의 수혜, 문화의 향유, 배움의 증대는 개인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편익의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다음 대분류는 기업(생산) 대분류로서 사회의 경제적 공급 및 생산부문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부 정책 영역을 포괄한다. 기업(생산) 대분류는 다시

고용/일자리, 산업/기업, R&D로 나누어 접근하여, 생산부문의 기본 단위인 기업 중심으로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분류는 정부행정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 국가의 기반여건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포함한다. 중분류로는 일반 중앙 행정업무, 지방 행정업무 사업들을 포함하는 대내행정, 주권국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국가 고유 업무인 외교, 통일, 국방을 포함하는 대외행정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하는 인프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는 해당 분류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참고로 기존의 정책분류에서는 정책의 명칭 위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의나 분류 기준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실적으로 명실상부하지 않은 사업 명칭이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분류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정책분류체계의 구축에서는 분야를 정의할 때 명칭 이외의 다른 기준들도 되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 가계 분류

가계 분류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소비자, 가구, 개인에 수요를 통해 직접적으로, 공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모두 포괄한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수요체계에 영향을 주는 수요 변화 요인들로 작용하는 정책들과 공급체계에 영향을 주어 영향을 주는 공급 변화 요인들을 함께 포함한다.

참고로 본 상위분류체계는 경제학 체계에 따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변화 요인을 대분류부터 다르게 나누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최종 균형 결과 값이 도출되겠지만, 본 분류체계에서는 수요를 통해 직접 영향을 주는 것과 공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접근으로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당 사업들을 수요와 공급으로 별도로 배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

지만 최종적으로는 두 사업들을 배반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게 되는데, 본 분류에서는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가계 분류에서는 직접, 간접적 영향을 전부 포함하고 기업(생산) 분류에서는 간접적 영향만 살펴봄으로써, 되도록 모든 정보량을 유지시키는 접근이다.

예컨대 문화 바우처를 주어 성공적으로 문화 수요를 진작할 수 있다면 문화 균형 수량이 증가하여 문화 산업도 진흥되겠지만, 해당 정책은 수요 정책으로 공급 정책이 아니므로 기업(생산) 분류가 아닌 가계 분류에만 포함한다. 비교하여 살펴보면 문화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감면하여 공급을 성공적으로 진작할 수 있다면 역시 문화 균형 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가계 분류와 함께 기업(생산) 분류에 속하도록 분류한다. 전자의 경우는 문화 사업으로만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는 문화에도 포함되면서 기업/산업 정책으로도 포함되어 분류한다.

따라서 본 분야 분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경우, 즉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균형 차원에서의 정책을 살펴볼 때 수요와 공급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된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와 관련한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화 분류와 함께 기업(생산) 분류에 해당 정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문화 수요 진작을 위한 소비자 정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가계 분류에만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문화 분류만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의 문화 사업이 다 포함되며, 문화 분류에서 공급 측면으로 함께 분류된 사업들은 제외한다면 순수하게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문화 사업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표 IV-2〉 문화 분류의 중복처리 분류 예시

문화(가계)	기업(생산)	정부행정(인프라)	판정
○	○	X	문화 공급 정책
○	X	X	문화 수요 정책
○	X	○	문화 인프라 정책

자료: 저자 작성

(1) 안전

안전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 위해 요인이 존재하여 다양한 결과 값이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³⁾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위험을 낮추고 부정적 결과의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공공적인 정책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안전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순수히 개인의 건강 위험 예방과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⁴⁾ 또한 역시 다른 안전 분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순수히 안전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업도 제외한다.⁵⁾ 예컨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의 피해 정도를 낮추는 사업들은 모두 안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적으로 소방 업무, 치안 업무, 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업들은 전부 안전에 포함된다. 참고로 안전은 주권국가의 존재를 전제한 이후 정의되는 분류이므로, 본 분류에서는 안전의 전제조건이 되는 주권 국가의 기본 요소인 국방, 통일, 외교와 관련된 사업들은 다른 안전 분류의 정의와 관계가 없는 한 제외하기로 한다.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을 포함하며,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모두 안전에 포함한다.

(2) 환경

환경은 국민의 생활 여건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가계에 직접,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책 사업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개인과 가구의 효용 감소 예방 및 개선, 환경 오염에 따른 효용의 감소 예방 및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터에서의 작업환경 개

3) 추상적인 불확실성이 아닌 경제학적 정의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4) 기본적으로는 보건으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이와 같이 분류해 보면 같은 대분류 안에 존재하는 안전과 보건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광의의 안전에는 보건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환경으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역시 환경도 광의의 안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도 본 사업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환경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순수히 개인의 건강 위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한 사업은 제외한다.⁶⁾ 앞서 가계 대분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분류는 가계 대분류 내에 속하므로 환경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간접적 접근에 관련된 사업들도 포함한다. 역시 최종적으로 직접적 접근과 간접적 접근의 구분은 앞서 제시한 예시와 같이 기업(생산) 대분류 중복 여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구성하기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목적에 환경 개선이 제시된 모든 사업을 포함하며, 탄소 중립, 기후 변화가 명시된 모든 사업들을 포함한다.

(3) 보건

보건은 국민의 건강 수준 개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책 사업을 포함한다. 건강상 위험의 발생을 낮추기 위한 사업,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의 치료와 관련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급과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수준에 간접적으로 시장을 통해 영향을 주는 사업은 기업(생산) 대분류에서 중복 분류하여 수요-공급 전체와 공급의 정보량을 유지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한다.

실무적으로 보건, 질환, 건강개선, 유해인자, 위해 관리 등의 단어들만 주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

(4) 복지

복지는 개인과 가구에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생산 능력의 손실이 발생하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과 가구에 제공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편의 제공은 복지 분류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6) 보건으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다만 물론 다른 환경 분류 기준에 포함되는 보건 관련 사업은 당연히 환경으로도 분류한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효율적이므로 효율적인 복지사업들은 대분류 기준으로는 가계에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생산부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지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비효율적임에도 실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들은 역시 기업(생산)에 중복 포함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참고가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업은 전부 복지에 포함한다.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기초생활 유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처한 대상들을 보조하는 사업들이나, 장애인 지원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대상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명확한 조건 없이 살포하는 맹목적인 복지사업들, 보편적 복지사업들도 만일 진정한 정책 목표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복지로 분류한다. 대상을 식별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임에 분명하지만 정책목적 측면에서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인 타당성은 낮지만 특정 성별이나 특정 연령 그룹 전체를 조준하는 사업들⁷⁾도 만일 정책 목적 측면에서 해당 그룹 내의 복지 수요가 있는 그룹에 대한 도움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면 복지사업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5) 문화

문화는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가계/가구의 문화생활 향유 제고를 위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설계된 사업들을 포함하는 분류이다. 앞서 든 예와 마찬가지로 문화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수요 진작책은 문화로 분류되지만 기업(생산)으로는 중복 분류되지 않으며, 문화예술인 지원이나 문화 산업 육성 등의 사업은 문화로도 분류되고 기업(생산)으로도 분류될 것이며,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는 문화로도 분류되고 정부행정(인프라)로도 중복 분류될 수

7) 예컨대 부유한 노인들이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함에도 노인을 경제적 약자로 규정하여 노인 전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여성들이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함에도 여성 전체를 경제적 약자로 규정하여 대상으로 삼는 정책들을 의미한다.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무적으로 문화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전부 문화로 분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들은 사실상 전부 포함되게 될 것이며, 사업의 목적으로 문화 형성이나 인식 개선을 표방하는 사업들도 함께 포함하기로 한다.

(6) 교육

교육은 사회 주체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사업들을 포함한다. 순수하게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은 교육으로만 분류될 것이지만, 도구적인 교육은 다른 분야와 거의 대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분류체계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영역 중 하나이다. 예컨대 문화 교육, 안전 교육, 보건 교육 등의 중복이 가능하며, 기초학문의 지원 등은 단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된다.

사업 분류에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전부 교육 분류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산학연 연계 사업들은 전부 교육 분류로 포함하게 될 것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 관련 사업들은 교육과 함께 기업 대분류하의 중분류인 일자리나 기업/산업과 중복 분류가 되도록 처리하도록 한다.

나. 기업(생산) 분류

기업(생산) 분류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기업,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들을 포괄한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공급체계에 영향을 주어 균형에 영향을 주는 공급 변화 요인들을 포함하는 정책들이 분류된다.

(1) 고용/일자리

고용/일자리는 사업체, 기업,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설계되는 모든 정책들을 포함하는 분류이다.

참고로 고용/일자리는 가계 정책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경계선에 위치한 분류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류체계 기준으로는 고용과 일자리는 경제학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급부문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산업 분류의 첫 번째 분류로 분류하였다.

현재 일자리 정책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고용/일자리 지원은 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분류인 산업/기업 지원과 대부분 연결이 될 수 있음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고용/일자리 분류가 산업/기업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단기적인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을 수 있는 노동자 보호, 권익 관련 사업들은 고용/일자리로 분류되지만 산업/기업으로는 중복 분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산업/기업

산업/기업은 산업과 기업을 지원 대상 또는 지원목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 산업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산업/기업 분류에 포함하도록 한다. 목적과 대상이 다른 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분류에 비해 상당히 정의가 직관적이며 수월한 편으로, 현재의 대부분의 개별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분류로 볼 수 있다.

(3) R&D

R&D는 기초, 응용, 상품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기술개발과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정책들을 포함한다.

R&D도 가계 분류 내의 교육과 함께 다양한 분류와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분류로, 현재 R&D 태그로 분류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본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로 현행의 일부 정책분류체계에서도 R&D는 독립적인 분류로 존재하지만, 역시 중복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R&D에 포함되면 해당 사업은 산업/기업이나 환경, 문화 등 다른 사업에는 포함될 수가 없는 데, 이는 R&D가 대부분 교집합이라는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 설명에 연구, 개발, 조사 연구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은 R&D에 포함하기로 한다.

다. 정부행정 분류

정부행정 분류는 정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사업들과 함께 주권국가의 존재 자체의 전제가 되는 사업들, 그리고 사회의 기본 인프라와 관련한 기반사업들을 포함하는 분류로 볼 수 있다.

(1) 대내행정

대내행정 분류는 정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간접비용, 사중손실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포함한다. 현재 분류기준으로는 중앙부처의 일반행정에 필요한 사업들, 지방행정과 관련한 사업 등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 일부가 포함된다. 소분류는 중앙부처 사업, 지방행정 관련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균형발전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대내행정 중분류에 포함한다. 지역혁신, 지방균형 등의 키워드들이 분류에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2) 대외행정

대외행정은 주권국가의 성립을 위한 기본 요소인 외교, 국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고려한 고유 영역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대외행정을 더 세분화한 소분류는 자연스럽게 외교, 국방, 통일로 나뉠 수 있는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해외진출 지원, 외국인 국내활동 지원, 글로벌화 지원,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 등은 전부 대외행정에 포함한다.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공외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3) 인프라

인프라 분야는 다양한 사회 간접자본과 관련 제도와 관련한 분야를 포괄한다.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인 SOC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시장시스템의 유지(공정거래 관련 정책과 정보제공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 금융시스템의 유지(금융정책 관련) 등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들도 인프라로 분류될 수 있다. 법무의 경우에도 안전으로 포함할 수도 있지만, 법 제도 자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인프라로 본다면 기본적인 법무 사업들은 인프라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본다면 인프라 분류를 다시 세분하여 소분류로 접근할 경우 시장인프라, 금융인프라, 법무인프라, SOC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금융 사업들은 전부 인프라 사업에 포함한다. 기간 시설 건설 사업의 경우는 당연히 인프라에 포함되며, 개별 사업과 관련된 건물 건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경우도 우선 인프라 사업에 포함하여 중복 분류하기로 한다. 실무 분류와 관련한 핵심 단어들은 클러스터, 단지조성, 금융, 도시조성, 정보화, 정보시스템 등이다.

라. 소결

이상의 상위 부문 분류체계는 대상과 목적, 수단이 혼용된 정부 “기능”형 기존 분류와 새로운 정책분류 간의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구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존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경제학의 기본 단위인 가계-기업-정부의 원칙으로부터 중복을 허용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하 하위 추가분류체계의 설계와 무관하게, 본 절에서 제시한 상위의 부문 분류체계만을 가지고도 현재의 재정사업들을 전부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분류체계와 차별화된 목적 적합한 재정통계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컨대 전체 문화관련 재정사업 전부와 수요자 측면의 재정사업 비중, 공급 측면의 재정사업 비중, 인프라 측면의 재정사업 비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 사업이 R&D, 교육 등의 사업들과 교집합을 이루는 영역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 하위 추가분류체계의 설계: 5W1H

다음으로는 상위 부문별 분류에 따라 하위 추가분류체계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육하원칙과 MECE 원칙에 기반하여 설계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정책분류에서 가장 이상적인 설계는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분류 축을 설정하고 각 축을 조합하여 한 사업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일반론으로서 육하원칙의 축들은 각각 직교하는 축들이 되므로, 각각의 교집합을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사업들을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하겠다. 참고로 한국인들은 언어 측면에서 분류체계의 정수인 훈민정음에서 비롯된 한글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합의 강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육하원칙의 조합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표 IV-3〉은 기업/산업과 관련한 코드의 예시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검증된 코드라고 볼 수 있다.

〈표 IV-3〉 기업/산업정책 하위 부문 코드북 예시

0. 기초 정보 코드

0.1 사업명(주관식): 사업의 이름

사업명: _____
 한 사업이 여러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경우, 동일한 사업명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업이 복수 입력될 수 있음

0.2 사업이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면 1번, 행정서비스 운영/개선 등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도달하지 않는 간접 사업이면 2번을 선택

- 1) 직접지원 사업
- 2) 간접 사업

0.3 해당 사업이 헌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이 지정한 주된 목적인 생산성, 자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1번, 기타 목적(예: 복지적 목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2번을 선택

- 1) 생산성, 자립 개선 목적
- 2) 기타목적(예: 복지적 목적)

1.1. 정책주체: 소속 기관 코드

주체1(2자리)	코드	설명	확인
정부부처 (2자리)	1	국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대통령비서실	
	4	대통령경호실	
	5	국가안보실	
	6	국가정보원	
	7	감사원	
	8	방송통신위원회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국가인권위원회	
	11	국무조정실	
	12	국무총리비서실	
	13	법제처	

〈표 IV-3〉의 계속

주체1(2자리)	코드	설명	확인
	14	국가보훈부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6	공정거래위원회	
	17	금융위원회	
	18	국민권익위원회	
	19	원자력안전위원회	
	20	기획재정부	
	21	국세청	
	22	관세청	
	23	조달청	
	24	통계청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교육부	
	27	외교부	
	28	통일부	
	29	법무부	
	30	검찰청	
	31	국방부	
	32	병무청	
	33	방위사업청	
	34	행정안전부	
	35	경찰청	
	36	문화체육관광부	
	37	문화재청	
	38	농림축산식품부	
	39	농촌진흥청	
	40	산림청	
	41	산업통상자원부	
	42	중소벤처기업부	
	43	특허청	
	44	보건복지부	
	45	환경부	
	46	기상청	
	47	고용노동부	
	48	여성가족부	
	49	국토교통부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 IV-3〉의 계속

주체1(2자리)	코드	설명	확인
	51	새만금개발청	
	52	해양수산부	
	53	서울특별시	
	54	부산광역시	
	55	대구광역시	
	56	인천광역시	
	57	광주광역시	
	58	대전광역시	
	59	울산광역시	
	60	세종특별자치시	
	61	경기도	
	62	강원도	
	63	충청북도	
	64	충청남도	
	65	전라북도	
	66	전라남도	
	67	경상북도	
	68	경상남도	
	69	제주특별자치도	

1.1.a 정책주체: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산업부의 경우 추가 코드 부여(중기부 예시)

주체1-a	코드	설명(1)	확인	코드	설명(2)	확인
	01	정책기획관		01	기획혁신담당관	
				02	재정행정담당관	
				03	규제개혁부담담당관	
				04	정보화담당관	
				05	비상재난담당관	
	02	중소기업정책관		01	정책총괄과	
				02	기업환경정책과	
				03	인력정책과	
				04	정책분석평가과	
	03	글로벌성장정책관		01	글로벌성장정책과	
				02	기업금융과	
				03	국제통상협력과	
				04	판로정책과	
	04	기술혁신정책관		01	기술혁신정책과	

〈표 IV-3〉의 계속

주제1-a	코드	설명(1)	확인	코드	설명(2)	확인
				02	디지털혁신과	
				03	기술개발과	
				04	기술보호과	
	05	지역기업정책관		01	지역혁신정책과	
				02	제조혁신과	
				03	기업구조개선과	
				04	입지환경개선과	
	06	창업정책관		01	창업정책과	
				02	기술창업과	
				03	창업생태계과	
				04	청년정책과	
				05	사이버경제추진단	
				06	미래산업전략팀	
	07	벤처정책관		01	벤처정책과	
				02	벤처투자과	
				03	투자관리감독과	
	08	특구혁신기획단		01	특구정책과	
				02	특구운영과	
				03	특구지원과	
	09	소상공인정책관		01	소상공인정책과	
				02	디지털소상공인과	
				03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	지역상권과	
				05	전통시장과	
				06	소비촉진기획총괄반	
	10	상생협력정책관		01	상생협력정책과	
				02	사업영역조정과	
				03	불공정거래개선과	
	11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01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2	소상공인재도약과	
	12	정책보좌관				
	13	대변인		01	홍보담당관	
				02	디지털소통팀	
	14	옴부즈만지원단				
	15	감사관		01	감사담당관	
	16	운영지원과				
	17	장관				
	18	차관				

〈표 IV-3〉의 계속

1.2. 정책주체(위탁):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있음에 체크 후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을 모두 기입

주체2 (2자리)	코드	설명	확인
(위탁기관 2자리)	없음	다른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부서에서 직접 집행	
	있음	사업 진행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1개 이상 있음	

주체2 (2자리)	코드	설명	확인
(위탁기관 2자리)	01	주관식	
	02	주관식	

2.1. 정책대상(규모): 사업의 주된 정책대상인 기업들이 속한 규모 코드(단일선택). 담당 사업이 모든 규모의 중소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면 0번을 선택

대상 (5자리)	코드	설명	확인
규모 (1자리)	00	전부	
	01	소상공인	
	02	소기업	
	03	중기업	
	04	중견기업	
	05	대기업	
	06	중기업과 소기업	

2.2. 정책대상(업력): 주된 정책대상인 기업이 속한 업력(기업의 나이)집단 코드: 사업이 여러 업력 집단을 각각 주된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사업업력 항목으로 새로 시작하여 별도 작성하며, 만일 전부 해당된다면 일반(0)을 선택

대상 (5자리)	코드	설명	확인
업력 (1자리)	00	일반	
	01	창업준비단계	
	02	창업 후 0년~3년(창업초기)	
	03	창업 후 4년~7년(창업중기)	
	04	창업 후 8년~10년(재도약기)	
	05	창업 후 10년 초과	

〈표 IV-3〉의 계속

2.3. 대상(산업): 사업이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속한 대분류 산업군 코드 (복수응답 가능). 만일 특별한 산업 대분류 기준 산업군 제한이 없다면 00번 선택

대상(산업A)	산업명(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산업코드 2자리를 나타냄)	확인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	광업(05~08)	
C	제조업(10~3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F	건설업(41~42)	
G	도매 및 소매업(45~47)	
H	운수업(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K	금융 및 보험업(64~66)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	교육 서비스업(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00	일반	

2.3.a 대상(산업): 사업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일 경우, 주관식으로 산업명이나 산업코드를 작성. 만일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산업(예컨대 유흥관련 산업)이 있다면 (배제)를 말머리로 하고 해당 산업을 작성

대상(산업B)	코드	설명	확인
주관식	01	주관식(표준산업코드 5자리 혹은, 산업명)	
주관식	02	주관식(표준산업코드 5자리 혹은, 산업명)	
주관식	03	주관식(표준산업코드 5자리 혹은, 산업명)	

〈표 IV-3〉의 계속

산업분류 예시표(표준산업분류 기준)

산업중분류	설명	확인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4. 대상(특수정책대상): 사업의 주된 정책대상이 다음의 정책적 특수대상에 해당한다면 코드 선택. 해당사항이 없으면 00번 해당

대상 (5자리)	코드	설명	확인
정책적특수대상 (2자리)	00	해당없음	
	01	신성장동력산업	
	02	창업기술형(벤처)	
	03	기술혁신형(이노비즈)	
	04	경영혁신형(메인비즈)	
	05	수출주도형	
	06	뿌리산업	
	07	스포츠산업	
	08	문화콘텐츠	
	09	ICT 산업	
	10	전략산업	
	11	부품소재	
	12	지식서비스	
	13	바이오	
	14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15	광역경제권	
	16	산업융합	
17	산학연계		

〈표 IV-3〉의 계속

대상 (5자리)	코드	설명	확인
	18	환경산업	
	19	기술지식창업기업	
	30	동반성장	
	40	창조경제	
	51	여성친화	
	52	청년친화	
	53	고령친화	

3.1. 정책목적: 사업의 주된 지원 목적을 지원기업의 입장(예: 지원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 지원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 등)에서 선택함(단일 선택). 사업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업항목으로 새로 시작하여 별도 작성하며, 만일 목적이 전부 해당된다면 일반(0)에 체크

목적 (2자리)	코드 [A]	설명	확인	코드 [B]	설명	확인
지원	0	일반		0	일반	
목적 (2자리)	1	시장진입지원(창업지원)		0	일반	
	2	생산성향상지원 (인력(고용)고도화, 자본(시설)고도화, 기술(연구개발)고도화)		0	일반	
				1	기술고도화(기술력)	
				2	공정프로세스개선	
				3	경영기능개선	
				4	인력고도화(고용)	
				5	작업환경개선	
				6	공급사슬관리개선	
				7	시설/기계고도화(시설)	
				8	기타	
	3	판로지원		0	일반	
				1	공공조달판로	
				2	수출판로	
				3	내수판로	
				4	하도급협상력개선	
				5	정보비대칭완화	
				6	기타	
	4	전환지원 (퇴출, 재창업 지원)		0	일반	

〈표 IV-3〉의 계속

4. 정책수단: 사업의 지원 수단(기업의 수령을 기준으로 함) 선택: 사업이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입력 항에서 새로 시작하여 별도 작성하며, 만일 전부 해당된다면 일반(0)을 선택

수단A	코드[A]	설명	코드[B]	설명	확인
지원방식 (2자리)	0	일반	0	일반	
	1	예산	1	보조금(직접)	
			2	출자금(직접)	
			3	출연금(직접)	
			4	대출금(직접)	
			5	인력파견(직접)	
			6	지원시설건설/운영(간접)	
			7	제품/서비스 품질인증(간접)	
			8	정부행정서비스품질향상(간접)	
			9	기타	
	2	금융 (예산 제외)	1	대출금	
			2	보증	
			3	보험	
			4	총액한도대출	
			5	기타	
	3	조세 감면	0	일반	
			1	세액공제	
			2	소득공제	
			3	손금산입	
			4	익금불산입	
			5	기타	
	4	시장 (조달)	0	일반	
			1	중소기업간 경쟁	
			2	창업기업 혜택	
			3	창업기업간 경쟁	
			4	벤처기업간 경쟁	
	5	생산원 가보조	0	일반	
			1	전기요금감면	
			2	수도요금감면	
			3	기타	

〈표 IV-3〉의 계속

수단A	코드[A]	설명	코드[B]	설명	확인
	6	규제차 등화	0	일반	
			1	생산요소관련(외국인 인력 등)	
			2	생산관련(환경규제 등)	
			3	시장진입규제(적합업종 등)	
			4	기타	

5. 사업예산 규모와 기업지원규모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실제 예산 배정을 받는 금액입니다)와, 기업의 혜택규모(예: 신용보증 40조원)를 기술

예산규모: _____

혜택규모: _____

자료: 장우현(2016), p. 53 부록표를 2023년 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및 수정

3. 상위-하위분류체계의 결합

이를 기반으로 상위와 하위의 분류체계를 결합하면, IBPCS를 완성하게 된다. 〈표 IV-4〉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상위와 하위 기준으로 분류한 사례를 보여주는 표로서, 부문판별코드라고 된 첫 행이 상위 분류이며 부문 부가코드로 주어진 열이 하위 분류이다. 상위 분류에서 고용/일자리와 산업/기업 정책인 것으로 판별이 되는 사업이며, 각 고용/일자리, 산업/기업 정책의 코드에 따라 세부 정보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개선된 분류체계하에서의 사업분류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처	실/국	위탁	시작 연도	현재 연도	장소	수단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문화	교육	고용/일자리	산업/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부문판별코드								0	0	0	0	0	0	1	1	0	0	0	0
(부문부가코드: 대상1)	고용 노동부 (48)	청년고용 정책관 (31)	중소 기업 진흥 공단 (010)	2017	2020	전국 (00)	예산· 보조금 (11)	N/A	N/A	N/A	N/A	N/A	N/A	성별연령 양성청년(01)	규모중기(01)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대상2)								N/A	N/A	N/A	N/A	N/A	N/A	학력소득 일반일반(00)	업력일반(00)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대상3)								N/A	N/A	N/A	N/A	N/A	N/A	업종일반(00)	업종일반(00)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특수대상)								N/A	N/A	N/A	N/A	N/A	N/A	특수대상 없음(00)	특수대상 없음(00)	N/A	N/A	N/A	N/A
(부문부가코드: 목적)								N/A	N/A	N/A	N/A	N/A	N/A	취업유지(11)	인력고도화 (24)	N/A	N/A	N/A	N/A

주: 1. 고용노동부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일자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산업/기업 사업이기도 하므로 부문판정에서 고용/일자리 사업이면서 산업/기업 사업으로 분류

2. 시행주체와 연도, 장소, 수단 등 공통요소는 공통코드로 분류

3. 수요자 중심 정보인 목적(Why)과 대상(For Whom)은 부문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일자리 분류와 산업/기업 세분화 분류에 따라 세부코드 추가 부여

4. 본 표는 본 과제가 working paper 단계였을 때 장우현·김지운(2021)에서 예시로 인용된 적이 있으며, 본 표가 인용 원 표임을 밝힘

자료: 장우현·김지운(2021), p. 101

V.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에 따른 정책분류 및 활용 예시

본 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제시한 상위분류체계와 하위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실제 사업들을 분류해 보는 예시를 제시함을 통해 정책분류체계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상위분류체계 예시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사업에 코드를 부여하면서 적정성을 확인하였지만, 본 절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중 일부의 사례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상위 분류의 경우는 환경부의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의 예시와 함께, 문화부의 세부사업기준 예산사업 전체를 예시로 들어 실제 분류 과정과 결과 및 기존 분류체계와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가.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2023년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은 크게 친환경산업육성지원, 환경기술개발보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연사업, 환경기술개발 보급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부사업은 총 20개이다. 세부사업의 하위인 내역사업 기준으로도 분류해볼 수 있지만, 본 예시에서는 재정성과관리의 기본 단위인 세부사업 기준으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우선 결과물은 <표 V-1>과 같다.

〈표 V-1〉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결과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수단
친환경 경제사회 활성화	친환경 산업 육성지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			○		○	○				17,693	직접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					○			○		20,876	직접 (위탁)
		중소환경기업사업화 지원			○					○	○			○	77,308	직접 (위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운영			○					○					2,752	직접 (위탁)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					○				○	208,893	융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	○			○	33,253	직접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					○	○			○	8,941	직접 (위탁)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				○	○	○			○	24,459	직접 (위탁), 이자 보전	
	환경기술 개발 보급	환경정책연구 개발사업(R&D)				○				○	○				1,416	직접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기술개발사업(R&D)			○	○						○			4,520	출연

〈표 V-1〉의 계속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일자리	기업/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수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평가관리사업(R&D)			○					○	○				8,886	출연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		○	○		○		8,597	직접	
		물대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				○		○	○				2,600	출연
		원천기술 연계 환경분야 적용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사업(R&D)			○				○		○	○				2,400	출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							○	○		1,500	직접
		스마트 그린도시				○							○		○	400	보조 (지자체)
		환경교육 강화				○		○	○							23,822	직접, 보조 (지자체)
	출연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					○	○		○	○	60,869	출연
		한국환경공단 출연				○			○			○		○		182,072	출연
	환경기술 개발 보급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		○	○	○				5,993	보조 (지자체)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해당 사업들의 사업정보를 확인한 결과 다른 여러 분야, 특히 기업/산업과 R&D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사업들이 기존의 정책분류체계에서는 대다수 환경으로만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에서 환경 열 하나 빼고는 기존 정책분류체계에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분류체계의 중복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의한 정보량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가 가능한 이유와 근거를 가계, 기업, 정부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각각 살펴보기로 하자.

〈표 V-2〉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가계부문, 근거 포함

세부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통합환경관리제도운영 및 고도화			○			○
			환경권 보호			교육홍보 활성화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			
			환경 목적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			
			환경 목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운영			○			
			환경 목적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			
			환경 목적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환경 목적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			
			환경 목적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			○
			환경 목적			녹색금융 아카데미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R&D)			○			
			환경 목적			

〈표 V-2〉의 계속

세부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기술개발사업(R&D)		○	○			
		인체건강 영향	환경목적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획평가관 리사업(R&D)			○			
			환경목적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
			환경목적			실무교육
물대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			○
			환경목적			기업 대학 연구소
원천기술 연계 환경분야 적용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사업 (R&D)			○			○
			환경목적			기업 대학 연구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			
			환경목적			
스마트 그린도시			○			
			환경목적			
환경교육 강화			○		○	○
			환경목적		환경교육 문화사업 (내역)	교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			
			환경목적			
한국환경공단 출연			○			○
			환경목적			환경사랑 홍보교육, 에듀센터, 인재개발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			○
			환경목적			지역내 대학, 환경교육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2〉에서는 왜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들을 간단히 첨부하였다. 예컨대 환경교육문화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존재하는 환경교육 강화는 문화로도 분류가 되어 있으며, 녹색금융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는 교육 분류로도 함께 분류하였다. 산학연 연계가 되는 경우는 교육으로도 분류했음을 알 수 있으며, 환경사랑홍보교육, 에듀센터, 인재개발원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환경공단 출연도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기술개발사업은 인체 건강영향 확인을 명시적으로 사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으로도 함께 분류하였다.

〈표 V-3〉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기업부문, 근거 포함

세부사업명	고용/ 일자리	기업/산업	R&D
통합환경관리제도운영 및 고도화		○	○
		사업장환경개선	연구사업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	
		환경기업지원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	○
		환경기업지원	녹색융합클러스터 연구개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운영		○	
		배출업체, 측정대행업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	
		환경산업지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
		환경산업지원	연구개발, 실증화목적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	○
		녹색산업지원	기술확보목적

〈표 V-3〉의 계속

세부사업명	고용/ 일자리	기업/산업	R&D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	○
		환경산업지원	기업평가시스 템 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R&D)		○	○
		경제성장상생	환경정책연구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기술개발사업(R&D)			○
			기술개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획평가관리사업(R&D)		○	○
		환경산업기술원 지원	환경기술개발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
		환경산업육성지 원	환경기술향상
물대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	○
		환경산업지원	원천기술
원천기술 연계 환경분야 적용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사업(R&D)		○	○
		기업 수행	실용화기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교육 강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환경산업기술
한국환경공단 출연			○
			시험분석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	○
		기업	연구거점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부의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산업과 R&D 분야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존의 정책분류체계에서는 환경 분류 사업들은 환경으로만 포함될 뿐 기업/산업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으며, 기존의 R&D 분류 사업은 환경이나 기업/산업 사업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예산이 폭증하거나 급감해도, 다른 분류에서는 해당 사업의 변화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만 생각해 보아도 기존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고용/일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산업 지원정책은 고용/일자리도 목적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정상 상황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과 관련한 판단 근거표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V-4〉 환경부 친환경경제사회활성화 프로그램 상위 분류:
정부부문, 근거 포함

세부사업명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통합환경관리제도운영 및 고도화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 개도국 지원, 대사관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 클러스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운영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 금융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클러스터

〈표 V-4〉의 계속

세부사업명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
			단지조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
			정보시스템, 금융활용, 금융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R&D)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기술개발사업(R&D)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획평가관리사업(R&D)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정보시스템
물대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원천기술 연계 환경분야 적용 실용화 촉진 기술개발사업 (R&D)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	○	
	지역 지속가능 발전확산	UN 국제협력	
스마트 그린도시	○		○
	스마트그린도시		그린도시조성, 운영
환경교육 강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	○
		해외진출컨설팅	환경정책 융자금, 환경 산업연구단지 관리운영
한국환경공단 출연			○
			정보화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		
	균형발전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에는 환경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격을 지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내역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도 있었고, 현행 정보화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역사업을 포함한 사업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사관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들, 각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컨설팅을 표방하는 사업들이 존재함에도 현행 정책 분류기준으로는 해당 사업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사업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사업들을 전부 분류해 보기로 한다. 또한 마지막에는 중복 요약표를 통해 기존의 분류체계 대비 상위분류체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중복이 확인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역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기존의 분류는 정보량 측면에서 문화 열 또는 R&D 열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상위분류체계 분류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V-5〉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사업 분류 예시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환경 조성	문화 산업 정책 개발 및 평가					0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콘텐츠	
					0	0		
					산업 정책을 위한 통계	조사연구 사업 (내역)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자원	비고	
			2,949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0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0	0		0	
				산업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57,568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콘텐츠 기업/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가치평가모 형 개발 (내역)			금융 (융자, 보증, 이자지원), 가치평가 시스템 도입 (내역)
			46,18	직접, 보조, 출연(보증 기관출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산학연계, 인재캠퍼 스(내역)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0	0				0	0
		인재육성 (내역)	콘텐츠 산업 지원			K 콘텐츠 세계화 (내역)	공용시설 운영 (내역)		
		55,140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인재육성 (내역)	콘텐츠 산업 지원			K 콘텐츠 세계화 (내역)	공용시설 운영 (내역)		
	55,140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영상콘텐츠 산업육성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콘텐츠 산업 지원				금융(펀드 출자)	
		160,000	출자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0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영화관인력 지원, 일자리 창출효과 도모 (내역)	콘텐츠 산업 지원	자료수집 복원 (내역), 백서 (내역), 정책개발 (내역)	지방균형 (내역)	국제 다큐멘터리 마켓 지원 외(내역)	건축 (공공시설 DB포함)	
			40,019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0	0
			문화예술인 지원 외(내역)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외(내역)	DB구축 (내역), 지역공연 장건축 (내역)	
			36,753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게임산업 육성	0					0	0
			건전게임 문화확산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게임마이 스터고 (내역)
			0	0	0			0	
			인재육성 (내역)	문화 기업/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내역), 국제대회 개최 (내역), 유통지원 (내역)		
			61,428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0	0	
						장애인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기업/산업 지원		지역혁신 성장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해외마켓 참가 및 홍보지원 (내역)	콘텐츠인 프라건축 (내역)
			62,266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한국콘텐츠 진흥원 지원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현안연구 (내역)	감사기능 고도화		방송영상 제작 인프라 구축 (내역)
			37,684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한국영상 자료원 지원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문화 산업 지원	영상자료 수집연구 (내역)			
			14,134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영상물등급 위원회 지원	0				0	
			유해성 여부, 청소년 보호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내역)	
			4,253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게임물관리 위원회 지원	0				0	0
			유해성 여부, 청소년 보호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이용자 교육 (내역)
			0	0	0	0		
			경단녀, 장애인 채용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14,695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패션문화 산업 육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인력 역량강화 지원 (내역)	문화 산업 지원			해외진출 교류 패션문화 마켓 지원 (내역)	온라인플 랫폼지원 (내역)
			10,269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만화산업 육성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연구사업 (내역) 만화백서 외		해외진출 지원 (내역)		
		23,971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0		
	이야기산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인력양성 (내역), 스토리텔러	문화 산업 지원	연구사업 (내역) 현안연구 외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스토리 (내역)	창작센터 운영 (내역)	
		7,131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0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환경 조성	지역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지원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지방균형 (내역)		IP용·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내역)	
		52,770	보조	계속, 증액	균특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콘텐츠 산업 기술지원 (R&D)	CT기반조 성(R&D)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문화기술 학부설립 지원	
			0	0		0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5,000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문화기술 연구개발 (R&D)		0		0	0	
			정신질환 치료 (내역)		시니어, 장애인, 다문화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서비스플 랫폼개발 (내역)	
	54,960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R&D)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첨단문화 공간 구축 (내역)	
			4,400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R&D)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5,500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R&D)					0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3,700	출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문화체육 관광 R&D 기획평가관 리사업 (R&D)					0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연구개발 사업관리 (내역)		
			5,216	출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신규) 장르별 문화기술 (CT) 전문인력 양성 (R&D)					0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산학연계 (내역)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1,500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차기정부 공약		
		(신규) 영상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변환기술 개발 (R&D)						0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콘텐츠		
				0	0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750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신규)메타 버스 콘텐츠 IP구축 연구개발 (R&D)						0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산학연계 (내역)	
				0	0		0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600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제작 지원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0	
			문화 산업 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금융 (출자)	
		35,594	보조, 출자	계속, 감액	영화기금			
	영화유통 지원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사업(내역)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독립예술 영화전용 관운영지 원(내역)	
		20,309	보조	계속, 감액	영화기금			
	영화정책 지원					0	0	0
						장애인 (내역)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내역)
		0	0		0	0		
		일자리환경 개선,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7,484	보조	계속, 감액	영화기금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첨단영화 기술육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2,801	보조	계속, 감액	영화기금				
		영화기획 개발지원					0	0		
							고령화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문화 산업 지원						
			6,998	보조	계속, 증액	영화기금				
		영화정보 시스템운영 (정보화)						0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정보시스 템운영 (내역)	
			2,547	직접	계속, 증액	영화기금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 인문 진흥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0			0	
						사회적 관계회복 지원센터 신설·운 영(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국어문화 진흥	인문정신 문화 사회적확산 지원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문화비소 득공제시 스템운영 (내역)		
		11,520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0	0	0		
					고령화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청소년 인문 역량 강화(내역)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20,966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0	0		
					장애인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98,907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0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자원	비고	
전통문화 진흥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33	기타(국제 부담금)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인력양성 (내역), 일자리창출		조사연구 사업 (내역)			
	17,753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동학농민 혁명 정신선양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5,537							
	전통생활 문화진흥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5,948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0	0		
			0			고령화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인력양성 (내역), 일자리창출						
			14,258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0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활성화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인력양성 (내역),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6,400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0	0	
		전통문화 혁신 성장 연구개발 (R&D)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산학연계 (내역)
				0	0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2,266	출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국제문화 교류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ODA)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0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5,126	보조 (ODA)	계속, 증액	일반회계			
	유네스코 협력 (ODA)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일자리창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585	보조(ODA)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제문화 정책지원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2,192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 기반 구축	국제문화 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3,408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공연장 안전교육 및 훈련					0	0	
						문화비소득 공제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공연공간 조성 (내역)	
			28,692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문화 산업 지원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공연전시 공간조성 (내역)		
		24,721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생활SOC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공연예술 창작 거점 조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지방균형 (내역)		창작거점 조성 (내역)	
		2,371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기초예술 역량강화	예술창작 활동 지원				0	0	
						장애인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8,937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0	0	0	0	0
				심리상담		기초생활보 장, 돌봄, 불공정관행 개선(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예술인권 리보호 교육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예술인권 리보장시 스템구축
		101,935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함께누리 지원				0	0		
						장애인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장애예술 공연장 운영	
			29,799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예술의 산업화 추진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인력양성 (내역), 일자리 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34,226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한국문학 번역원 지원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산학연계, 대학원 설립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6,608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5,572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건축예술 아카데미 운영	
			0	0	0		0		
			인력양성 (내역)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1,423	직접, 보조, 민간위탁	계속, 증액	일반회계			
		미술진흥 기반 구축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인력양성 (내역),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판로개척	공공데이 터구축, 창작주거 공간조성	
			56,729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예술 교육 지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0		0	0	0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고령화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학교 문화예술 교육,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0	0	0	0		
			인력양성 (내역),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127,358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문화예술 교육(ODA)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일자리창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384	보조 (ODA)	계속 동결	일반회계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도서관정보 ·정책 체계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지방균형 (내역)		공공도서 관 건립, 플랫폼 구축
28,423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박물관 정책 활성화	해외공공도 서관 조성 지원 (ODA)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079	직접, 보조 (ODA)	계속, 증액	일반회계			
	박물관·미 술관 진흥 지원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대학박물 관 지원
		0	0	0	0	0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0,416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773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코로나로 인한 불용		
	(가칭)이건 희기증관 건립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						
			2,500	직접	신규, 증액	일반회계		
						0	0	
					고령화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인력양성 (내역)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8,661	직접, 보조(민간, 지자체)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0	0		
					고령화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지방균형 (내역)			
		3,589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0	0		
					가격할인 보편복지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지방균형 (내역)			
		21,641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지역문화 기본시설 구축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지방균형 (내역)				
			319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불용			
		지역문화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화)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정보시스 템 구축		
			5,045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문화·관광 행정지원	종합정책 연구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0				0	
					중대재해에 방 및 대응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1,707	직접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럼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0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293	직접	계속, 증액	일반회계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0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6,458	직접, 보조, 출연	계속, 증액	일반회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0	
							문화체육관광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인력양성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2,688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데이터 신산업 육성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공공데이 터구축	
			1,000	보조	신설, 증액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1,335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정책연구 개발 (R&D)						0	
							문화체육관광부사업, 콘텐츠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1,843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정보화 체계 구축	문화분야 디지털 융복합 생태계 조성					0		
							문화체육관광부 광부사업, 콘텐츠		
					0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조직역량 강화			
			1,000	직접, 보조	신설, 증액	일반회계			
		한국문화 정보원 운영 (정보화)					0	0	
						장애인 고령화 (내역)	문화체육관광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0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문화 산업 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조직역량 강화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공공데이 터구축	
			19,518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문화행정 공동활용 체계 구축 (정보화)					0	0	
						장애인 (내역)	문화체육관광부 광부사업, 콘텐츠		
						0			
						조직역량 강화			
			7,878	직접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문화정보 지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정보화)	0					0	
			정보보안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027	직접,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정보화)					0	0	
							장애인 (내역)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0	0	0		0
				문화 산업 지원	연구개발 사업	지방균형 (내역)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26,782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차기정부 공약		
		예술창작 지원						0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문화창작 교육
								0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공연인프 라운영
			61,021	직접, 보조	계속, 증액	문예기금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예술인력 육성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28,267	직접, 보조	계속, 감액	문예기금				
		예술인생활 안정자금 (용자)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18,000	용자	계속, 감액	문예기금	국정과제	금융 (용자)	
		예술인생활 안정자금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1,087	보조	계속, 증액	문예기금	사업운영비 지원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 예술지원					0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콘텐츠	
					0				
					지방균형 (내역)				
3,439	보조			계속, 감액	문예기금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예술의관광 자원화						0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콘텐츠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7,083	보조	계속, 감액	문예기금				
	예술향유 기회확대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구. 예술정책 및 기부 활성화)				0	0		
						고령화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콘텐츠		
				0				0	
				ESG경영 지원				금융(펀드 출자)	
			21,758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문화예술 향유지원					0	0	
						저소득층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콘텐츠		
							0		
						지방균형 (내역)			
			212,371	보조	계속, 감액	문예기금	국정과제		

〈표 V-5〉의 계속

프로 그럼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종교문화 지원	종교문화 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 활동지원		0		0	0		
				마음돌봄 치유사업		북한이탈 주민, 고령화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종교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1,758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0			0	
				사찰방재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종교		
					0		0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46,862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종교문화 시설건립		0			0	
				요양시설 건축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종교		
						0	0	0	
						지방균형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종교시설 인프라 구축	
		20,960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법난심의 위원회 운영				0	0		
						법난 피해자의로 비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종교		
			232	직접,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지원	국내관광 여행적금 지원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관광		
				0		0		0	
				문화 산업 지원		지방균형 (내역)		금융(이자 지원)	
		3,000	보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지역균형 관광 활성화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관광		
				0		0			
	문화 산업 지원			지방균형 (내역)					
2,500	보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 교류	관광외교 역량강화 (ODA)					0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관광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346	보조 (ODA)	계속, 동결	일반회계	국정과제					

〈표 V-5〉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처마킹 사업연수 (ODA)					0	
							문화체육 관광부 사업, 관광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068	보조 (ODA)	계속, 동결	일반회계	국정과제	
		지속가능 관광 발전지원 사업 (ODA)					0	
							문화체육관 광부사업, 관광	
							0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564	보조 (ODA)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주: 빈칸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 또는 R&D 하나의 기준으로만 분류되도록 강요된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사중복 사업들이 새로운 상위분류체계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중복을 한 표로 요약하면 〈표 V-6〉과 같다.

〈표 V-6〉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사업 분야별 교차 성격 분포표

구분	안전	보건	환경	복지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문화	예산액 (백만원)
안전	9	2	1	1	4	4	6	7	4	5	3	9	191,854
보건	2	9	1	4	4	5	7	7	4	5	6	9	385,024
환경	1	1	3	0	1	0	2	2	2	2	1	3	84,860
복지	1	4	0	22	4	11	16	11	13	8	8	22	963,386
교육	4	4	1	4	19	12	18	15	7	12	4	19	590,856
고용/ 일자리	4	5	0	11	12	47	40	33	21	31	16	47	1,309,193
기업/ 산업	6	7	2	16	18	40	81	59	38	46	36	81	2,782,859
R&D	7	7	2	11	15	33	59	70	29	39	24	70	1,675,328
대내 행정	4	4	2	13	7	21	38	29	53	27	21	53	1,485,564
대외 행정	5	5	2	8	12	31	46	39	27	71	20	71	1,756,175
인프라	3	6	1	8	4	16	36	24	21	20	42	42	1,902,394
문화	9	9	3	22	19	47	81	70	53	71	42	131	4,060,223
문화 대비율	7%	7%	2%	17%	15%	36%	62%	53%	40%	54%	32%	100%	-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6〉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사업은 문화로 분류되며 총 사업 수는 131개이다. 이 중 9개는 안전과 중복되며 (첫 행 또는 첫 열), 이 9개 사업은 또다시 보건과 2개 중복, 환경과 1개 중복, 복지와 1개 중복 등으로 복수 중복된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사실상 모든 사업들이 모든 성격에서 단수도 아닌 복수로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각 행렬이 문화와 나머지 11개 분야가 중복되는 중복사업 수를 나타내는데, 기업/산업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 81개, R&D 성격이 있는 사업은 70개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들을 문화로만 분류하고 기업/산업 또는 R&D로는 분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 간 중복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업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인 분류인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별로 나누게 되면 중복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중복성을 지니는 사업들을 보다 쉽게 식별해낼 수 있게 된다. 실제 재정당국의 재정 성과관리의 기본단위가 세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역이나 내내역사업들을 고려할 필요성도 함께 확인된다 하겠다.

2. 하위분류체계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내역사업

하위분류체계는 육하원칙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역사업 분류를 예시로 들기로 한다. 내역사업의 수는 본 보고서에서 전수로 보이기에는 많기 때문에, 내역사업은 전부 제시하지 않고 <표 V-7>에서 일부의 사례를 제시하기로 한다. 내역사업의 육하원칙 적용의 사례를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내역사업의 사례로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상위 분류에서는 기업/산업과 대외행정예 공유되는 사업으로서, 하위 기업/산업 분류로는 (주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성장정책관실에서 (대상) 업력이나 대상산업은 무관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수정책) 동반성장정책에 해당하는 특수정책으로서 (목적) 기업의 수출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 (수단)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쯤으로 유추하기 어려운 사업의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랩 허브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은 (주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에서 (대상) 업력과 규모는 무관하지만 제조업 중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수단)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명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볼 수 있다.

〈표 V-7〉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역사업 상위 및 하위 분류 예시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수출지원 기반활용	수출바우 처사업	0	0	0		0	
				인재육성 (내역)	수출판로	조사연구 사업 (내역)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12,530	보조, 바우처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수출바우 처사업
				42	03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기관 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32	11	34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수출판로	보조금	112,530/3,306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수출컨소 시업	0				0	
				수출판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4,112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수출컨소 시업
				42	03	위탁기관 코드	06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 기관명	중기업과 소기업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30	32	11	71	
주관식				동반성장	수출판로	보조금	14,112/20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대중소기 업동반 진출						
					0			0	0
					수출판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대기업 보유 해외거점 인프라 활용
				17,129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대중소 기업동반 진출
				42	03	위탁기관 코드	06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 기관명	중기업과 소기업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30	32	11	14	
				주관식	동반성장	수출판로	보조금	17,129/ 1,190	
			전자상거 래수출시 장진출						
					0			0	0
					수출판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물류 인프라 지원
				38,507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전자상거 래수출시 장진출
				42	03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32	11	5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수출판로	보조금	38,507/ 7,500	
					0			0	
					수출판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15,300	보조	계속, 동결	일반회계	국정과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42	03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기관 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32	11	24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수출판로	보조금	15,300/ 630	
					0		0	0	
			수출지원 센터운영		수출판로		지방 행정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2,868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수출지원 센터운영
				42	03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30	32	11	191	
				주관식	동반성장	수출판로	보조금	2,868/15	
					0			0	
			브랜드K 육성관리		수출판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600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브랜드K 육성관리
				42	03	위탁기관 코드	06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 기관명	중기업과 소기업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30	32	11	7	
				주관식	동반성장	수출판로	보조금	2,600/ 350	
									0
									창업교육
		국제 중소기업 ODA 사업	우간다 청년창업 사관학교 설립	0	0			0	
				인재육성 (내역)	수출판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2,000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의무, ODA	우간다 청년창업 사관학교 설립
				42	03	위탁기관 코드	06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 기관명	중기업과 소기업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32	11	2000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수출판로	보조금	2000	
									0
									창업교육
				0	0			0	
			라오스 비엔티안 테크노파 크 조성 및 IT전문인 력 양성	인재육성 (내역)	수출판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600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의무, ODA	라오스 비엔티안 테크노파 크 조성 및 IT전문인 력 양성
				42	03	위탁기관 코드	06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글로벌성 장정책관	위탁 기관명	중기업과 소기업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9	32	11	2600	
				주관식	ICT산업	수출판로	보조금	260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중소기업 행정지원	정책정보 제공기반 구축 (정보화)	중소벤처 행정 정보화 (정보화)	대민정보 시스템 통합운영 체계 구축						
					0		0		0
					정보비대 칭완화		일반행정		정보화 인프라
				3,722	출연, 직접	계속, 증액	일반회계	정보화	대민정보 시스템 통합운영 체계 구축
				42	01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 기획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18	3722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질 질향상 (간접)		
				0					
				정보보안					
					0		0		0
					정보비대 칭완화		일반행정		정보화 인프라
				1,849	출연, 직접	계속, 동결	일반회계	정보화	사이버안 전센터 운영
				42	01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 기획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주관식	00	00	18	1849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 (간접)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0		0		0
					정보비대 칭완화		일반행정		정보화 인프라
				3,749	출연, 직접	계속, 증액	일반회계	정보화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42	01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 기획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18	3749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 (간접)		
			창의실용 행정문화 조성				0		0
							일반행정		행정서비 스 인프라
				202	직접	계속, 동결	일반회계	정보화	창의실용 행정문화 조성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42	01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 기획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18	202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 (간접)		
			정책전문 가과정 운영						
							0		0
							일반행정		행정서비 스 인프라
				682	직접	계속, 동결	일반회계	정보화	정책전문 가과정 운영
				42	01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 기획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18	682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 (간접)		
			정책전달 효율성 증대						
							0		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일반행정		행정서비 스 인프라
			1,610	직접	계속, 동결	일반회계	정보화		정책전달 효율성 증대
			42	01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정책 기획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18	1610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간 접)			
							0		0
							일반행정		행정서비 스 인프라
			264	직접	계속, 감액	일반회계			관사구입 및 임차
			42	1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운영 지원과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18	264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 (간접)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 (간접)		
창업환경 조성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저변 확대	혁신창업 기양성						0
									기업가정 신교육
				0	0				
					창업지원	조사연구 사업(내역)			
				23,808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혁신창업 기양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1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준비 단계	제한없음
				주관식	00	10	16	23808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지원시설 운영		
								0	
								창업교육	
			0	0					
				예비창업 기 양성	창업지원				
			7,362	보조	계속, 동결	일반회계	국정과제	혁신창업 스쿨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2	0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정책 관	위탁기관 명	전부	창업 후 0~3년 (창업초기)	제한없음
				주관식	00	10	16	7362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지원시설 운영		
			도전K 스타트업	0	0				
				우수창업 자 육성	창업지원				
				2,115	보조	계속, 동결	일반회계	국정과제	도전K 스타트업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2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 후 0~3년 (창업초기)	제한없음
				주관식	00	10	16	2115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지원시설 운영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0			0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4,870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글로벌스 타트업 페스티벌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2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기관 명	전부	창업 후 0~3년 (창업초기)	제한없음	
				주관식	05	32	16	4870		
				주관식	수출 주도형	수출판로	지원시설 운영			
			창업관리 시스템등						0	
										창업교육
					0	0				0
					창업지원	조사연구 사업(내역)				창업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6,334	보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창업관리 시스템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10	18	6334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정부행정 서비스품 질향상			
			탈북민 기업가 육성				0		0	
							탈북민		창업교육	
				0				0	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창업지원 센터 운영
			180	보조,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탈북민기 업가육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2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 후 0~3년 (창업초기)		제한없음
			주관식	00	10	13	180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창업사업 화지원							
				0					
				창업지원					
				65,000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예비창업 패키지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1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준비 단계	제한없음
			주관식	19	10	11	66		
			주관식	기술지식 창업기업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보조금	65,000/ 992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0					
					창업지원					
			초기창업 패키지	61,000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초기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2	00	
			초기창업 패키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 후 0~3년 (창업초기)		제한없음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식	00	10	13	98		
			초기창업 패키지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61,000/ 620		
					0	0				
					고용창출	창업지원				
			창업도약 패키지	59,154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3	00	
			창업도약 패키지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 후 4~7년 (창업중기)		제한없음
			창업도약 패키지	주관식	00	10	11	150		
			창업도약 패키지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보조금	59,154/ 394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							
					0					
					창업지원					
					101,320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혁신분야 창업 패키지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1	10	11	180	
					주관식	신성장동 력산업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보조금	101,320/ 562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0			0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15,905	보조, 출연	계속, 동결	일반회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주관식	05	32	13	80	
				주관식	수출 주도형	수출판로	출연	15,905/ 200	
			창업중심 대학						0
									대학연계 사업화
				0	0				
				고용창출	창업지원				
				70,000	보조,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창업중심 대학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1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준비 단계	제한없음
				주관식	02	10	13	93	
				주관식	창업기술 형(벤처)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70,000/ 750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0				
					창업지원				
				9,000	보조,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1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기관 명	전부	창업준비 단계	제한없음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주관식	00	10	13	120		
				주관식	제한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9,000/75		
			공공기술 창업사업 화지원							
					0					
					창업지원					
					3,000	보조,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공공기술 창업사업 화지원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19	10	13	150	
					주관식	기술지식 창업기업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3,000/20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0	0		0		
					창업지원	상품화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77,766	보조, 출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민관공동 창업자발 굴육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19	10	13	129	
				주관식	기술지식 창업기업	시장진입 지원 (창업지원)	출연	77,766/ 605	
					0				
					창업지원				
			사내벤처 육성	5,000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사내벤처 육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2	10	13	100	
				주관식	창업 기술형 (벤처)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5,000/5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아기 유니콘 200 육성						
					0			0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20,000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아기유니 콘 200 육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1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창업준비 단계	제한없음
				주관식	05	10	11	150	
				주관식	수출 주도형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보조금	(20,000/ 67)*50%	
			민관협력 오픈이노 베이션 지원						0
				창업지원					대기업보 유 인프라 활용
				4,643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민관협력 오픈이노 베이션 지원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30	10	13	100	
				주관식	동반성장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100*40, 사무국 643	
					0	0		0	0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대기업보 유 인프라 활용
			글로벌 기업협력 프로그램	27,360	보조,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글로벌기 업협력프 로그램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5	10	11	150	
				주관식	수출 주도형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보조금	150*182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빅데이터 기반 창업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창업 플랫폼 구축 ISP						
				0		0		0	
				창업지원		일반행정		창업분야 빅데이터 구축	
				500	보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빅데이터 기반 창업플랫 폼 구축 ISP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정책 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9	05	11		
				주관식	ICT산업	정보비대 칭완화	보조금	전체기업 대상	
		K-바이 오 랩허브 구축사업 (R&D)	랩허브 구축 및 운영		0				0
				감영병 대응, 바이오 헬스				대학연계 기술개발	
				0	0		0	0	
				창업지원	신약개발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500	출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랩허브 구축 및 운영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C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일반	제조업
				주관식	13	00	13		
				주관식	바이오	일반	출연	전체기업 대상	
				0	0				
				고용안전	전환지원				
				16,838	보조	계속, 동결	일반회계	국정과제	재도전성 공패키지
			재도전성 공패키지	42	02	위탁기관 코드	06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정책관	위탁기관 명	중기업과 소기업	일반	제한없음
				주관식	00	40	11	77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전환지원 (퇴출, 재창업 지원)	보조금	전체기업 대상	
				0	0	0			
			중소기업 구조혁신 기술개법	고용안전	전환지원	구조혁신 R&D 지원			
				3,800	보조	신규,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중소기업 구조혁신 기술개법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28,300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메이커 활성화 지원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정책 관	위탁기관 명	전부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00	10	11	38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보조금	28,300/ 738		
			중장년기 술창업 센터							
					0	0		0		
					고용안전	창업지원		지역균형 (내역)		
					3,686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중장년기 술창업센 터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정책 관	위탁기관 명	전부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19	10	13	105	
					주관식	기술지식 창업기업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35개 센터 대상	
			창업존 운영							
					0	0				0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역량강화	창업지원					통번역, 테스트베 드 등 창업기업 인프라 지원
			4,931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창업존 운영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정책 관	위탁기관 명	전부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02	10	13	4931		
			주관식	창업기술 형(벤처)	시장진입 지원(창업 지원)	출연	센터 1개 대상		
			0	0					
			창업지원	창업지원					
			5,058	보조, 출연	계속, 감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42	06	위탁기관 코드	02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정책 관	위탁기관 명	소기업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40	30	06	500		
			주관식	창조경제	판로지원	지원시설 건설/운영 (간접)	160개사* 500백만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0
									대학연계 네트워크
				0					0
			스타트업 파크	창업지원					대학연계 클러스터 구축
				6,150	보조, 출연	계속, 증액	일반회계	국정과제	스타트업 파크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17	00	06	6150	
				주관식	산학연계	일반	지원시설 건설/운영 (간접)	1개소 대상	
									0
					창업지원				클러스터 구축
			그린스타 트업타운 조성	0	직접	계속, 감액	일반회계	기금으로 이관	그린스타 트업타운 조성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 정책관	위탁 기관명	전부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18	00	06		
				주관식	환경사업	일반	지원시설 건설/운영 (간접)		

〈표 V-7〉의 계속

프로 그램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 산업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주체1	주체 1-a	주체2	정책대상 (규모)	업력	대상 산업
				대상산업 코드	특수정책 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	예산규모(백만원)/ 혜택규모(기업수)	
					0		0		
				창업지원			일반행정		
			광주전남 중기청구 청사리모 델링	0	직접	계속, 감액	일반회계	불용	광주전남 중기청구 청사리모 델링
				42	06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정책 관	위탁기관 명	전부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06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일반	지원시설 건설/운영 (간접)		
					0		0		
					창업지원		지역균형 (내역)		
			지역기반 로컬크리 에이터 활성화	5,000	보조	계속, 감액	일반회계		지역기반 로컬크리 에이터 활성화
				42	09	위탁기관 코드	00	00	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	위탁기관 명	전부	전부	제한없음
				주관식	00	00	11	27	
				주관식	해당사항 없음	일반	보조금	170개팀	

〈표 V-8〉 중기부 IBPCS 12개 중분류 예시

프로그램 명	단위사 업명	세부 사업 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중액여부	재원	비고	
창업환경 조성	창업 확성화 지원	창업 저변 확대	혁신창업 가양성						0
									기업가정 신교육
					0	0			
					창업지원	조사연구 사업(내역)			
				23,808		계속, 감액		국정과제	
			혁신창업 스쿨						0
									창업교육
				0	0	0			
				예비창업 가 양성	창업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7,362		계속, 동결		국정과제	
			도전K 스타트업						
				0	0				
				우수창업 자 육성	창업지원				
			2,115		계속, 동결		국정과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0			0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표 V-8〉의 계속

프로그램 명	단위사 업명	세부 사업 명	내역 사업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기업/산업	R&D	대내행정	대외행정	인프라
				예산액 (백만원)	수단	계속, 증액여부	재원	비고	
				4,870		계속, 증액		국정과제	
			창업관리 시스템등						0
									창업교육
				0				0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4,870		계속, 증액		국정과제	
			창업관리 시스템등						0
									창업교육
				0	0				0
				창업지원		조사연구 사업 (내역)			창업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6,334		계속, 증액		국정과제	
			탈북민 기업가 육성				0		0
							탈북민		창업교육
				0				0	0
				창업지원				공공외교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창업지원 센터 운영
				180		신규, 증액		국정과제	

주: 빈칸은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9〉 산업/기업 내역사업 코드부여 예시

내역 사업명	1. 주체1	1. 주체 1-a	1.2. 주체2	2.1. 정책 대상 (규모)	2.2. 정책 대상 (업력)	2.3. 대상 (산업)	2.3.a. 대상 산업 (코드)	2.4. 대상 (특수정책대상)	3.1. 정책 목적	4. 정책 수단	5. 예산규모/혜택 규모
혁신 창업가 양성	43	05	위탁	00	00	00	00	00	10	16	23,808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 진흥 정책관		전부	창업준비단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당사항없음	시장진입지원 (창업 지원)	지원시설운영	
혁신 창업 스쿨	43	05	위탁	00	02	00	00	00	10	16	7,362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 진흥 정책관		전부	창업 후 0~3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당사항없음	시장진입지원 (창업 지원)	지원시설운영	
도전K 스타트업	43	05	위탁	00	02	00	00	00	10	16	2,115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 진흥 정책관		전부	창업 후 0~3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당사항없음	시장진입지원 (창업 지원)	지원시설운영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43	05	위탁	00	02	00	00	05	32	16	4,87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진흥 정책관		전부	창업 후 0~3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출주도형	수출 판로	지원시설운영	
창업 관리시스템등	43	05	위탁	00	00	00	00	00	10	18	6,334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 진흥 정책관		전부	일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당사항없음	시장진입지원 (창업 지원)	정부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탈북민 기업가 육성	43	05	위탁	00	02	00	00	00	10	00	180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 진흥 정책관		전부	창업 후 0~3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해당사항없음	시장진입지원 (창업 지원)	일반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10〉 중소기업부의 일부 내역사업의 분야별 교차 성격 분포표

구분	안전	보건	환경	복지	문화	교육	고용/ 일자리	R&D	대내 행정	대외 행정	인프라	기업 /산업	예산액 (백만원)
안전	1	0	0	0	0	0	0	0	1	0	1	1	1,849
보건	0	1	0	0	0	1	0	1	0	1	1	1	500
환경	0	0	0	0	0	0	0	0	0	0	0	0	
복지	0	0	0	1	0	1	0	0	0	1	1	1	180
문화	0	0	0	0	0	0	0	0	0	0	0	0	0
교육	0	1	0	1	0	9	4	3	0	4	4	9	118,934
고용/ 일자리	0	0	0	0	0	4	12	2	1	3	1	12	290,074
R&D	0	1	0	0	0	3	2	7	0	4	3	7	252,098
대내 행정	1	0	0	0	0	0	1	0	15	1	10	9	69,614
대외 행정	0	1	0	1	0	4	3	4	1	16	5	16	354,227
인프라	1	1	0	1	0	4	1	3	10	5	20	14	127,063
기업 /산업	1	1	0	1	0	9	12	7	9	16	14	45	892,277

주: 분석대상 예산사업은 중소기업부의 프로그램 예산사업 11개 중 세 가지인 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 중소기업행정지원, 3. 창업환경조성 사업에 해당함. 이외에도 4.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7. 지역중소기업육성, 8.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9. 동반성장지원, 10. 중소기업육성지원, 11. 중소기업인력지원 등의 프로그램 예산사업이 존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V-8〉은 내역사업별로 분류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중소기업부 사업들의 상위분류체계의 교차 성격 분포표를 작성한 것이다. 앞선 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세부사업으로 살펴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복의 정도가 낮은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45개 사업 중 16개가 대외행정, 20개가 인프라, 12개가 고용/일자리와 중복되는 등 다양한 중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정책분류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업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분류해 본 결과, 사전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명실상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문제의 정도는 심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예시로 분류해 본 문화나 환경, R&D 사업들의 경우 사실상 다른 모든 분야와 중복성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 분류 내에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들은 산업/기업 분류에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환경 사업 분류 내에 명시적으로 환경 보건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들은 보건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는지, 다른 정보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임에도 R&D 성격이 있다고 해서 R&D 로만 분류되고 정보화에서는 누락되는 현실은 사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각 분야별로 국가 이미지 개선, 해외 진출 등 외교와 관련된 수많은 대외협력 사업들이 존재함에도 해당 사업들을 현행의 분류에서는 식별해 낼 수 없다는 점도 수많은 사례 중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공외교 등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사소하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책 제언으로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위분류체계, 즉 중복을 허용한 12대 분야 기준으로 현재의 모든 재정 사업들을 분류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실제 수행해 본 결과 현재 제시한 상위분류체계만으로도 모든 사업의 분류가 가능하며, 적어도 정보량에 있어 기존의 정책분류 체계에 비해 유의하게 우월한 정보량을 체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었다. 연구

수행에서 확인한 업무 부담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중형 부처 사업을 세부사업 수준에서는 충분히 분류할 수 있는 업무량으로 판단하는바, 연구자 한 명이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소수의 인력으로도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모든 사업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로 현재 분류체계가 정착할 경우, 실제 분류는 인력 외 인공지능에 맡겨서 진행해도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일반론으로서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분류 기준이 명확하다면 인공지능은 분류에 강력한 보조 도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무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인력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산요구서나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여 분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로 본 연구의 결과에는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론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반발을 받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가 새롭냐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디어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만일 본 연구의 산출물이 창의적이라면 반드시 반발은 있을 것이다. 비록 나중에는 제대로 인용도 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처음에는 반발이 심할 수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어도 상위분류체계의 활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분류체계에 있어서도 기존 분류체계의 정보량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새로운 분류를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전환 단계에서 기존의 분류를 주된 분류로 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부가 분류로 나누어 보아도 된다. 예컨대 앞서 제시한 문화콘텐츠 산업 예시의 경우 주된 분류는 기존과 유사하게 문화인 것으로 보되, 부가 분류 정보로서 예시로 제시한 기타 분류들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8) 처음 접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도 말이 안 되는 경우는 틀린 아이디어이며, 처음부터 알고 있어 당연한 아이디어는 진부한 아이디어이다.

이처럼 접근한다면 기존 분류체계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장점은 더해지되 단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든 정책분류에 분류 개념의 정의와 실무 가이드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현행 정책분류체계를 활용하더라도 개념의 정의와 분류 가이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수행한 리뷰 결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책 분류체계는 각 분류의 단어 정의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당 분류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과제의 주된 기여 중 하나가 분야를 정의하고 실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실이 간과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도출하지 못하고 개인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모호한 표현을 정의와 가이드로 제시하고 정책을 분류한다면, 해당 분류 기준은 적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또 다른 정책적 제언으로, 정책연구계에서의 집단 지성의 위협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앞서 보인 것처럼 현행의 정책분류체계에서는 초등 수학 수준의 기초 집합론의 지식이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그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단 기준은 유용성이 있을 때도 있겠으나, 집단 지성의 오류에 의한 잘못이 존재할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지연시키고 혁신을 막는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정책연구계에서 흔히 확인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과거 발전도상 과정에서는 해외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도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음을 부인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무비판적인 수용

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도 프론티어에 도달하고 있으며 독자적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 연구자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는 해외 사례, 글로벌 스탠다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세는 지양하고, 모든 문제의 본질부터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나 해외 사례는 정책 연구나 설계, 시행, 성과관리 및 평가에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해야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서 그대로 따르자는 식의 접근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본 연구에 기반한 가장 중요한 정책제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상위 분류를 이용하여 재정성과관리, 평가, 지출구조조정, 기초통계 산출 등 재정정책 전반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정당국의 재정통계 산출, 사업 파악, 재정성과관리 등에 전체적·보편적으로 개선된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특정 성격을 지니는 사업들을 전수로 확인하여 도출하는 데에도 상위 분야 분류는 장점을 지닐 수 있는데, 12개 기본 분류는 물론 해당 분류 내에 속한 중분류 사업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보건 분류 전체, 기업/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기업/산업 분류 전체를 확인하면 되는 식이므로 가장 간단하며, 재정사업 중에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확인하고 싶다면 전체 재정사업 중 대외행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만 체크하여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외교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사업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대외행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들만을 체크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적합 사업을 확인하여 과목 적정성을 개선하는 데에 상위 분류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분류가 가져야 하는 성격을 갖지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공통분류 사업과 지나치게 이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과목 재분류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 중복 사업의 정리, 지출구조조정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상위 분류의 결과는 바로 활용될 수 있다. 12개 분야의 성격에 있어 유사도가 높은 사업들의 경우를 도출하여 통폐합의 가능성이나 효율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간 단계로는 각 분야별로 육하원칙에 따른 중복이 최소화된 하위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위 정책분류는 최대한 체계를 잡기 위해 노력한 산물이지만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이는 기존의 정책분류체계가 특별한 원칙이 있었다기보다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발생한 정부 부처들을 기준으로, 즉 육하원칙 중 주어 중심으로 정책을 분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의 상위 부문 분류체계는 대상과 목적, 수단이 혼용된 정부 “기능”형 기존 분류와 새로운 정책분류 간의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차원에서 구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기존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경제학의 기본 단위인 가계-기업-정부의 원칙으로부터 중복을 허용하는 접근을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분류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야의 MECE 분류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상위와 하위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MECE 분류가 탄생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대중들과 연구자들, 정책 담당자들이 MECE 분류에 익숙해진 이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간과정에서는 현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상위 분류와 하위 분류로 나누어 접근하며 이를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정책분류체계가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현행 정책분류체계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의 정책분류체계는 성격상 중복성이 높은 분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개별 사업을 한 가지 분류만으로 분류할 것을 강요하는 체계라는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한 사업에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성격들을 다른 분류로 나누어 두고, 한 분류로만 분류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기초 수학의 기초 집합론 수준에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류체계 자체의 체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분류체계는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발생한 수행 부처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 자체가 체계적이지도 않으며 추상적인 단어만 제시되고 해당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분류체계 일반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본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정책 분류의 기초로 삼고 있는 기능별 분류체계인 COFOG 시스템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위분류체계와 하위분류체계의 설계를 제안하고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분류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학적 분류를 기초로 하되 사업 간 중복 분류를 허용하여 구성된 상위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또한 중복을 최소화하

기 위해 누가, 언제,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라는 육하원칙 축에 따라 구성하는 하위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두 체계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분류체계가 실제로 이전의 정책분류체계로는 수행할 수 없었던 정보 산출 및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시와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는 상위와 하위분류체계 완결성을 갖지만, 부분적,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상위분류체계만으로도 기존의 분류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많은 정보량을 추가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하나의 분류로만 분류되던 사업들의 다른 성격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분류체계로 분류된 성격을 지닌 사업들의 전체적인 식별과 확인, 그리고 유사 중복 사업의 도출 등에 있어서 이전의 정책분류체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사업을 세부사업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사업들을 내역사업 기준으로 분류해 본 결과,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유사 중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사업 기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분류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업을 오히려 찾기 어려웠으며,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분야의 지출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보기반 분류체계의 장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한편, 중간과정에서의 변화전략도 함께 고려한 연구로서는 최초의 연구 중 하나인 만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관련한 후속 작업이나 연구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현재 연구하는 연구자들 외에도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23년 성과계획서(문화체육관광부)」, 2022a.
_____, 「2023년 성과계획서(중소벤처기업부)」, 2022b.
_____, 「2023년 성과계획서(환경부)」, 2022c.
_____, 「2023년 성과계획서(고용노동부)」, 2022d.
_____,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 박정수·나원희,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2020.
- 외교부, 「2020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2021.
- 장우현,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과평가와 개선방향: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장우현·김종혁·강경민·소준영·이은솔·이응준,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을 위한 범정부 사업 실태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장우현·김지운,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GFSM 2001)*, 2001.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장우현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에서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반영하는 정책분류체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이다. 개별 정책수요자이자 정책 재원의 근간이 되는 담세의무자인 국민들에게 사업의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기본적 의무이며, 재정당국이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정보들이 충실히 담긴 정책분류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분류체계는 부처 중심, 공급자 중심의 분류체계로서 정보 중심, 수요자 중심의 재정성과 관리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낮다. 기존의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부처 예산전달 목적의 기존 예산체계를 따르고 있어, 성과관리에 필요한 개별 사업의 정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분류체계에 기반한 기존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어 중심의 분류체계로서 사업의 핵심 정보인 목적과 대상 관련 정보가 충실히 담겨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기존 분류체계는 복수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하나의 분류로 분류할 것을 강제하는 분류체계인바 공통사업과 유사중복사업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

제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성과관리, 재정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정보 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BPCS)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든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을 수 있는 분류체계의 정의와 구축 원칙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분류안을 모색하되, 기존 COFOG 분류에 익숙한 현업을 고려하여 보다 친숙하게 성과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안을 함께 도출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란 정보의 기본 기술단위인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MECE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정의한다. 육하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은, 육하원칙은 해당 체계가 사업을 중복 없이 배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상호 배반(Mutually Exclusive) 원칙과 정보를 표현함에 있어 가장 포괄적이라는 전체포괄(Collectively Exhaustive) 원칙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육하원칙으로 사업을 분류하면 정보를 MECE 기준으로 필요 충분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대중들이나 현업 종사자들은 아직 기존의 분류에 익숙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로 정책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으므로 차선의 중간단계로서 상위 분류는 중복을 허용하도록 설계하고, 하위 분류를 육하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을 설계의 원칙으로 삼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위에 해당하는 부문은 경제학적 기준에 따라 12대 분야로 분류하되 해당 분류는 서로 중복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하위 분류는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실제 상위 분류와 하위 분류를 종합하는 실용안을 모색하기였다.

상위 분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사업들을 상위 분류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먼저 모든 사업을 상위 분류로 수월하게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기존 정책분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131개 세부사업을 상위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기존의 분

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중복이 확인되는데, 총 131개 사업 중 81개 사업은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업 분류에도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해당 분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70개 사업은 문화와 함께 연구개발 성격이 확인되지만, 기존의 분류에서는 각각 문화 또는 R&D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 분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역사업들을 육하원칙으로 분류해 본 결과, 수월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양한 사업 간 유사 중복성을 하위 분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 제시한 상위분류체계만으로도 모든 사업의 분류가 가능하며, 적어도 정보량에서 기존의 정책분류체계에 비해 유의하게 우월한 정보량을 체계적으로 포함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상위 분류는 즉각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실제 정책을 분류해 볼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확인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사업들에서 기존 분류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중복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정책분류체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이다. 또한 소수의 인력으로도 현재 상황에서도 상위 분류의 경우 모든 사업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즉각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분류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특히 추후에는 인력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산요구서나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여 분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책분류체계를 재정성과관리, 평가, 지출구조조정, 기초 통계 산출에 폭넓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정 성격을 지니는 사업들을 전수로 확인하여 도출하는 데에도 새 체계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확인하고 싶다면 전체 재정사업 중 대내행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만 확인

하면 되므로 유용성이 있다. 또한 개별 사업이 의도한, 현재 분류된 해당 분류가 가져야 하는 성격을 갖지 못한다든지, 해당 사업이 다른 공통분류 사업과 지나치게 이질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들은 과목 재분류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위 12개 분야의 성격에 있어 유사도가 높은 사업들의 사례를 도출하여 통폐합의 가능성이나 효율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정책분류체계가 논리적,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현행 정책분류체계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이 정책분류의 기초로 삼고 있는 기능별 분류체계인 COFOG 시스템 자체가 가진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이니만큼 부족함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보완 연구를 함께 해 주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for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Woo Hyun Chang

A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that faithfully captures and reflects the information of fiscal projects is the fundamental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expenditure structure adjustment.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projects to citizens, who are both individual policy demanders and the foundation of policy funding, is a basic obligation of fiscal authorities. In order for fiscal authorities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performance of policies, a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contain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projects is indispensably required.

However, the existing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s less suitable as an information-centric, demand-oriented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tool, as it is department-centric and supplier-centric. The current fiscal performance project classification system adheres to the traditional budget system designed for inter-departmental budget allocation purposes, leading to inadequate reflection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individual projects.

The existing fiscal performance project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our country's fiscal project classification system is fundamentally aligned with the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which follows a government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However, this can be seen as a subject-centric classification system, lack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purpose and target-related details, which are vital aspects of project information. One notable issue with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is its inadequacy for managing common projects and similar overlapping projects, as it forces the classification of projects with multiple characteristics into a single categ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BPCS) for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expenditure structure adjustment. For this end, the study first defined the IBPCS and established principles for a classification system capable of containing information for all fiscal projects. Additionally, while exploring an ideal classification, practical alternatives were derived to make it more user-friendly for performance management purpos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miliarity of practitioners with the existing COFOG classification.

The new 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atic classification based on the six basic principles of information, classifying policies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MECE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criteria. The choice of the six basic principles as the foundation is due to their ability to satisfy the mutually exclusive principle, allowing the system to classify projects without duplication, and the collectively exhaustive principle, being the most comprehensive in expressing information.

Although classifying projects based on the six basic principles has the advantage of ensuring a MEC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practical challenge in completely reclassifying policies into an entirely ideal form, as the general public and practitioners are still accustomed to the existing classification. Therefore, as a pragmatic intermediate step, the design principle was established to allow duplication in upper-level classifications, while applying the six basic principles to lower-level classifications. Specifically, the upper-level sectors were classified into 12 major categories based on economics criteria, allowing for overlapping classifications, and the lower-level classifications were proposed to be designed based on the six basic principles. Ultimately, the study aimed to explore a practical solution that integrates both upper and lower-level classifications.

To verify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upper-level classification, we attempted to classify detailed project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based on the upper-level classification criteria. Initially, we confirmed that all projects could be easily classified into upper-level categories and identified various shortcomings in existing policy classifications. In the cas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131 detailed projects for the year 2023,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upper-level system revealed numerous overlaps not identified i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Out of the total 131 projects, 81 targeted industries and businesses, indicating the need for inclusion in the industry/business category, a task that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couldn't perform adequately. Additionally, 70 projects showed a research and development nature alongside cultural aspects, highlighting a flaw i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which forced a choice between cultural or R&D categorization for all fiscal policies.

To assess the functioning of the lower-level classification, we classified

internal projects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based on the six basic principles, confirming the ease of classification and identifying various similarities and overlaps among projects at the lower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wo policy recommendations. Firstly, the current upper-level classification system alone is sufficient for the classification of all projects and, at least in terms of information quantity, it significantly outperforms the existing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the immediate adoption of the upper-level classification is suggested for the classification of all actual policies. The study revealed diverse overlaps in all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at were not identifiable in the existing classification, representing valuable and novel information. Moreover, considering that even with a small workforce, the upper-level classification can classify all projects, it is feasible to promptly classify all projects. In particular, the futur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apid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budget requests and project plans, supplementing human resources.

Secondly, we propose to widely utilize the new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for fiscal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expenditure structure adjustment, and basic statistical calculations. The new system has immediate applicability as it holds advantages in comprehensive confirmation of projects with specific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if one wishes to review projects related to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it is sufficient to examine projects classified under domestic administration within the entire fiscal projects, demonstrating its practical utility. Furthermore, it allows easy identification of whether individual projects align with their intended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r exhibit

significant heterogeneity compared to other commonly classified projects, enabling adjustments by selecting those projects for reclassification. Additionally, by extracting cases of projects with high similarity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per 12 sectors, exploring the potential for consolidation or efficiency improvement is more feasible with the proposed new classification system than approaching the situation without it.

In this study, we not only identify the logical and systematic shortcomings of the current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but also highlight the inadequacy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The issues raised in this study are not exclusive to South Korea; they indicate problems inherent in the COFOG system, a 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 used as the basis for policy classification worldwide. Therefore, we emphasize the need for global improvements in this found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While this initial study may have limitations, we hope that future researchers will show interest and contribute additional supplementary studies for further refinement.

■ 저자약력

장우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매디슨캠퍼스 경제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매디슨캠퍼스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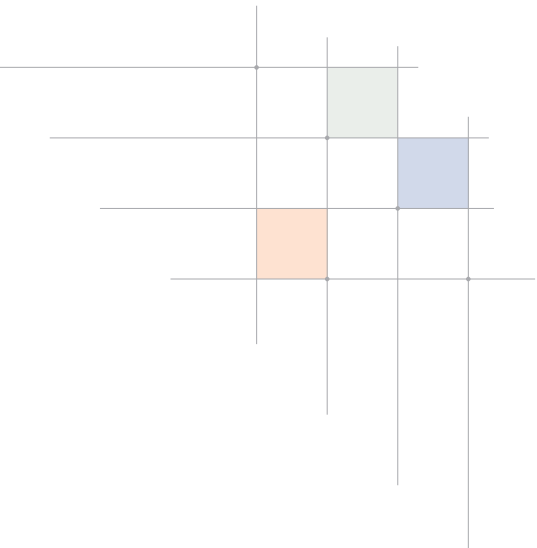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3-16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발행	행	2023년 12월 29일
저자	자	장우현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20,000원
조판 및 인쇄	쇄	고려씨엔피
I S B N		979-11-6655-257-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9 791166 552571

ISBN 979-11-6655-257-1